



2013
과거와
그리고 **애도!**
영웅

2013. 2. 23
참여연대 제19차 정기총회

총회결의문

더 넓고 깊게 시민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사회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사회적 요구가 분출한 해였습니다. 낡은 재벌특혜구조와 극단적인 사회적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의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검찰권 남용, 정권의 미디어 장악에 맞서 사회적 분노도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쫓겨나고 내몰리는 이들의 절규와 저항이 '함께 살자'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편협한 냉전논리와 적대감이 야기한 국내외에서의 갈등과 대결구도를 상호이해와 공존의 질서로 회복하자는 문제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열망들은 특히 대선을 계기로 새로운 정치, 시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치세력과 후보들은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의 보호, 반부패와 정치개혁, 공안기구의 개혁과 시민의 자유의 확대, 평화와 공존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제 이 목소리는 하나의 시대정신이자 우리사회의 발전방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는 동떨어져 있음을 새삼 실감합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탑농성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약속한 집권세력 내에서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어도 좋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공안기구의 주도 하에 유야무야될 위기에 놓여 있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을 평가할 장관 후보들은 한결같이 자질부족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과 냉소는 참된 주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대선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책무입니다. 이에 제19차 정기총회를 맞아 참여연대 회원과 임원, 활동가들은 시민의 일상과 현장으로 더 깊숙이 더 넓게 다가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행동할 것을 다짐하면서 참여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습니다.

첫째, 우리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더욱 집요하게 권력집단을 감시하고 부당한 권력행사에 맞설 것입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기능하도록 국회와 정치를 바로 세우고, 권한을 남

용하는 검찰을 감시하고 사법제도를 개혁하며, 부당한 행정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시민의 견제 수단을 제도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는 시민의 자구 행동을 조직하고 앞장설 것입니다.

둘째,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 등 대중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의제들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서민, 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도록 정책대응과 시민행동을 강화하고,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복지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진보적 사회운동의 혁신과 활성화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 평화, 생태, 풀뿌리 민주주의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대안 담론의 소통구조를 형성하고 민주진보진영의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갈등과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는 캠페인을 연중 내내 벌이고, 군대와 보안기구 등 냉전적 안보논리가 지배하는 국가기구를 민주화하기 위한 도전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넷째, 현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 모니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당사자나 행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배제되고 소외된 이들과 연대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노동권 보호와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문제를 따뜻한 연대로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참여연대를 시민의 놀이터로 만들고, 공감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이 모여드는 '참여시민 양성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섯째, 2014년은 참여연대 창립 20주년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성찰과 쇄신으로 새로운 20년을 맞이하겠습니다. 20년 활동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콘텐츠와 활동방식, 조직구조를 혁신하겠습니다.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소원해진 참여연대 인적네트워크를 복원하여 참여연대 공동체를 강화하고 인적·물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활동력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회원활동가, 상근활동가, 전문가 활동가들이 보다 열정적인 활동으로 새로운 참여연대를 만들어내겠다는 결의를 다질 뿐 아니라, 더 많은 회원과 전문가, 자원활동가 등 참여연대와 함께 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활동 동력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근자와 각 활동기구, 상임집행위원과 운영위원, 자원활동가와 열성회원 등 참여연대 일꾼들은 그 어느 때 보다 강한 열정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성실히 활동할 것을 결의합니다.

2013년 참여연대 제19차 총회 참석자 일동

차 례

총회결의문 1

이렇게 일했습니다 2012년 사업보고

6대 중점과제 7

4대 발전과제 19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25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공익법센터 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민생희망본부 시민경제위원회 조세재정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아카데미느티나무 참여사회연구소

사무처 51

연대활동 56

소송 성과 62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2013년 사업계획

활동 목표와 방향 65

10대 중점과제 66

① 중소기업·서민·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

② 지속적인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③ 모두를 위한 복지제도 현실화

④ 노동권 보호와 비정규직 문제해결

⑤ 유권자 참정권 확대와 국회·정치 바로 세우기

⑥ 검찰권 오·남용 감시와 검찰 민주화

⑦ 부당한 행정과 공권력에 대한 시민견제 수단 확대

⑧ 정전 60주년, 갈등과 전쟁을 끝내자 캠페인

⑨ 회원 15,000명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⑩ 참여연대, 시민의 놀이터 만들기

특별과제.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사업 83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86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공익제보지원센터 공익법센터 사회복지위원회 노동
사회위원회 민생희망본부 시민경제위원회 조세재정개혁센터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아카데미느티나무 참여사회연구소

사무처 102

연대활동 108

2013년 일정표 109

살림살이 2012년 결산 및 2013년 예산

2012년 재정 및 회계 감사 보고 113

2012년 결산안 115

2013년 예산안 119

조직과 운영원리 정관개정

정관개정안 125

참여연대 정관 126

기구표 134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임원선임

임원선임안 137

2013년 임원명단 139

통계로 보는 참여연대 2012

회원 현황 143

시민참여/문화프로그램 145

시민교육 149

감시와 정책제안 151

■ 부록 159 회원 설문조사 결과 / 참여연대 노래

2012년 사업보고

6대 중점과제
4대 발전과제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무처
연대활동
소송 성과

**이렇게
일했습니다**

중점과제 1. 2012 총대선 정책 캠페인 및 유권자운동

• 중기(2012) 목표와 방향

- [정책캠페인] 19대 국회 입법과제 제시, 후보자 약속운동 등 정책캠페인을 통해 개혁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
- [유권자운동]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온라인상에서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함
- [이명박 정부 평가와 한국사회 개혁과제 제시] 이명박 정부의 권력운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과 개혁과제를 제시함
- [정당개혁 촉구] 각 정당의 공약과 공천과정을 감시하고 개혁을 촉구함

• 주요활동 및 성과

1.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구성과 유권자 운동 전개

- '기억, 약속, 심판'을 모토로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총선)> 발족(2월)과 활동 주도
- <2012 총선넷 심판명단 및 집중 낙선대상자 후보명단>, <뽑지 말아야 할 140인> 심판명단, 2012 총선넷 소속 단체별 낙천명단 및 집중낙선명단 선정 발표(3~4월)
- 시민 400여명 참여한 <유권자 정책 컨테스트>, <후보자 약속운동 33대 정책과제> 선정(3월)
- 2012 총선넷 리멤버뎀 웹사이트(rememberthem.kr)을 통해, 기억/약속/심판 온라인 유권자운동, <선거를 축제로, 유권자 투표혁명 개념찬 콘서트>(1만여명 참여), <유권자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 투표인증샷 운동 등 다양한 투표참여운동 진행

2. 한국사회 개혁과제, 국회 입법과제 발표 및 단행본 발간

- <참여민주주의,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평화체제 실현 2012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과제> 발표 및 토론회 개최(1~3월)
- <이것만은 바꾸자! 이것만을 밝히자! 19대 국회 2012년 입법과제 및 청문회 과제> 보고서, <고장난 나라 수선합니다 -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55개 키워드> 단행본 발간(6월, 12월)

3. 대선 정책 검증을 위한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 시리즈 발간

-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평가하고, 참여연대의 정책을 제안하는 '대선정책 이슈리포트'를 24개 발표(9~12월,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기초생활보장정책 비교 평가>, <주요 대선후보별 최저임금정책 비교평가>, <대선 주요 후보의 반부패·정부투명성 정책공약 평가>,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보호 정책 평가>, <대선후보별 검찰개혁 공약평가>, <주요 대선후보 한반도·외교통상·국방정책 비교평가> 등)
- 정책/공약 관련 현안에 대응한 대선 논평 30여회 발행
- 박근혜·문재인 후보 공약비교 <2012대선 30개 쟁점 단박정리> 인포그래픽 온라인 배포(12월)

• 약평 및 보완과제

- 총선에서는 총선유권자네트워크를 결성해 심판운동과 약속운동을 진행하였고, 대선에서는 정책평가 연속 이슈리포트 발표를 통해 정책캠페인운동 진행하였음. 정책에 따른 심판운동과 약속운동은 새로운 시도였고, 후보자 선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음. 시리즈로 발간된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와 대선논평은 정책선거에 일정하게 기여함
- 총선시기 대응전략을 부패 및 선거법 위반 등을 기준으로 한 낙천낙선운동에서 정책에 따른 심판운동과 약속운동으로 진행하였으나 과거보다 영향력은 작았음. 정책을 유권자의 선택기준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
- 총선에서 정당의 공천과정을 감시하고 정당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기획했으나,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함. 차기 선거에서는 정당개혁의 관점에서 공천과정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야 하겠음.
- 총선 직전 및 새 국회 개원 시기, 대선 시기 각각 한국사회 개혁과제와 입법과제를 종합하여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개혁과제를 총망라한 '고장난 나라 수선합니다'라는 단행본 발간의 성과가 있었음

중점과제 2.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인터넷·SNS 상시 선거운동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 유권자의 자유를 옥죄는 규제 중심의 현행 선거법 전면 개정
- 유권자 표현의 자유 옹호 활동 및 법률 지원
- 선거법 개정 촉구 유권자 행동 및 투표참여 캠페인
- 유권자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보장 캠페인(추가 목표)

• 주요활동 및 성과

1. 인터넷 선거운동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선거법 93조 1항) 결정 취지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SNS를 통한 유권자 선거관련 표현의 자유 확보하고 2007년 헌법소원 제기의 결실을 거둠(2월)
- <선거법 93조 1항 한정 위헌과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및 <선거법 개정 유권자 로비단> 발족(1월)과 공익입법로비 활동

2. 규제 중심의 선거법 전면 개정안 입법운동 지속

- 공직선거법 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위헌심판제청 신청(1월)
- 인터넷 실명제, 정책 비교 평가 제한, 정책캠페인 규제 등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해온 15개 독소조항 개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9월)

3. 투표권 보장 캠페인 진행

-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투표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청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발의,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이슈리포트 발행 등(8~9월)
-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발족(10월,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나도 투표하고 싶다 - 투표권 보장 국민선언> 발표,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기자회견,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1차)>

와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2차, 5만명)> 국회 제출(10~11월)

- <유통업종 판매직 여성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청년 아르바이트생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12월), 서울시 및 25개 구에 <18대 대선 선거일 투표권 보장을 위한 요청> 공문 제출,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 운영 및 제보접수

• 약평 및 보완과제

- 2월,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이 개정된 후, 선거법 개정 요구는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후보자비방죄, 정책 비교 평가 제한, 정책캠페인 단속 조항 등 남아있는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운동이 필요하며 나아가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개정 논의가 필요함.
- 투표권 보장 캠페인은 비록 투표시간 연장 입법화는 무산되었으나, 투표권 행사에서 배제당한 유권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었음.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 뿐만 아니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 등 선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중점과제 3. 4대 가계부담 완화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교육비·주거비·통신비·이자부담 문제를 '4대 가계 부담'으로 규정하고, 이슈파이팅을 벌이며,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
- 이에 따른 4대 목표로 1. 고교 의무교육화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2. 전세대란 해결 및 서민주거안정 3. 이동통신요금 인하 및 통신공공성 회복 4. 폭리 근절 및 가계 이자부담 완화 등을 설정

• 주요활동 및 성과

1. 4대 가계부담 문제 관련 총선 및 대선 정책평가 및 제안활동

- <각 정당 초청 주거복지 정책과제 토론회> 공동개최,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과 총선 전 반값등록금 정책협약 체결(4월), 대선 후보 정책책임자 초청 등록금문제 토론회 및 <대선 후보 등록금정책 평가> 보고서 발표(12월)
- <각 정당 대선후보 가계부채,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비교·평가> 보고서(12월)
-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과 함께 총대선 시기 이동통신비 인하, 무료인터넷음성통화(보이스톡) 허용 등의 정책 촉구 질의서를 발송하고 제 정당·후보들의 답변 공론화

2. 반값등록금 도입 운동 등 교육비 부담 완화 활동

- 반값등록금 실현과 국가장학금 문제 관련 보고서 발표, <반값등록금 완전정복 국민대회>(3월), 릴레이 1인 시위 및 108배 진행,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국가장학금 분노기> 공모 진행(6~7월), <국가장학금 개선과 기성회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8월)

3. 전세대란 해결 및 서민주거 안정, 주거비 부담 완화 활동

-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 철회와 서민주거안정 대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7월), 참여연대·오마이뉴스·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공동 수기공모 캠페인 <나는 세입자다> 진행(8월~10월)
- <하우스푸어 대책 검증 및 통합도산법 개정 토론회> 공동 개최(10월)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다룬 <보증자리주택 사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11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 토론회 공동 주최(11월)

4.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통신공공성 회복 활동

-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모집 및 소송제기(4~10월)
-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일부 승소(9월, 2심 진행 중)
- 무료 무선인터넷음성통화(보이스톡)의 허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

5. 가계부채 및 이자부담 완화 활동

- 이자제한법, 과잉대출규제법, 파산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등 서민금융보호 6법 제·개정안 입법청원(7월) 및 의원발의(7월~12월)
- <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 공동 개최(9월), 대선 후보 정책 책임자 초청 가계부채 대책 및 서민금융보호 정책 토론회 개최
- 서민단체, 금융소비자NGO 등과 함께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대부업법 10년 맞이 기자회견' '채무조정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개최
- 공익적 채무자NGO인 '빛을갠고싶은사람들' 출범 지원, 실행위원들이 <약탈적 금융사회> 단행본 출간

• 약평 및 보완과제

-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가계부채 등의 문제가 여·야 모두 총·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놓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았고, 실제 반값등록금과 고교 무상교육, 가계부채 대책과 최고이자율 인하,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상당한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음
- 통신비 문제의 경우 이동통신요금원가공개소송 1심 승소와 휴대폰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 집단소송 등을 통해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
- 그러나 4대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대책이 실제 입법화되고 예산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대중적이고 끈질긴 캠페인이 필요함. 이를 위해 더 많은 전문가의 참여, 더 많은 당사자들과의 연대를 기획하여 관련 대책들이 실제 입법화, 정책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 즉, 참여연대 차원의 전문적이고 기동적인 보고서와 문제제기를 강화하면서도, 주요 민생문제 당사자들의 조직화와 관련 활동을 지원·협력하여 민생운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병행해야 함.

중점과제 4.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2012년 총·대선에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독점심화 문제 쟁점화
- 독점 규제(중소기업·중소상인 영역 침탈 방지), 사회적 책임 증진(법인세 증세, 고용책임 이행), 불공정행위(담합, 하도급 횡포,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 초반에 제출하여 공론화하고 입법로비 진행

• 주요활동 및 성과

1. 재벌·대기업 불공정행위 규제 및 경제민주화 정책 제시

- 재벌대기업 법인세 특혜 보고서(5월),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보고서(9월) 등을 발표하고 정기국회에서 각종 간담회 진행,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등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집중 활동 전개
- 특히 중소기업인 문제를 중심으로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운동, 서울시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골자로 하는 조례 발의(2월)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규정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 제출(6월), <중소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입법청원 및 공청회(9~10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 이슈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해법을 공론화함. 나아가 하반기에는 재벌·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들과 함께 공정위 고발(11월), 연합집회(12월) 등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 원혜영 의원 등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경제민주화 관련 제반 정책 이슈 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와 실행위원들의 연속적인 각종 매체 기고문 게재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론화

2.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결성과 정책·대중운동 전개

- 노동, 청년, 중소기업, 씽크탱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결성 및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3대 방향 13대 과제> 발표,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토론회, 원하청 불공정 거래 문제의 실태와 대안 토론회, 경제민주화와 노동문제 토론회 연속 개최(6~10월)

- 노동자, 중소기업인, 청년세대 등과 함께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경제민주화 국민대회/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촛불문화제 등), 기자회견, 거리 캠페인(경제민주화국민선언 등) 집중 전개(11월~12월)

3. 총선·대선후보의 정책 평가 및 정책 반영 활동

- <경제·복지·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초청 토론회>,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국회(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토론회> 진행 및 연석회의, <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 평가> 보고서, <문재인·안철수·박근혜 후보의 중소기업·자영업자 정책 진단 토론회>(3~12월) 등으로 총선·대선 시기 정책이슈 파이팅 전개

• 약평 및 보완과제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종합적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청년 등 각계 당사자들과의 연대 및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결성으로 적극적인 대중운동을 전개함.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가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과 관련한 대표적인 연대기구로 위상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 할 것임. 다만, 총선·대선에서 활발한 정책·대중운동을 전개했음에도 정치권과 언론의 경제민주화 이슈를 주도하는 역할까지는 수행하지 못했고, 또 실제 정부와 국회의 입법화·정책화를 이뤄내는 데 한계를 보였음.
-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청년 등의 조직화 및 전국적 투쟁에 결합하여 총선·대선시 주요 이슈화를 시도한 측면은 긍정적이나 중소기업 이슈, 노동자 이슈의 결합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음. 향후 중소기업, 자영업자, 청년, 서민 등과 결합력은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등과의 결합력과 이슈파이팅도 더욱 보완해야 할 것임.
-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 및 제도 개선 노력을 감시, 압박하는 기구로서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의 유지와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자영업자·청년·서민 등 각 분야의 당사자 조직들의 활동과 계속 활발하게 지원·연대해나가야 할 것임. 참여연대는 그 과정에서 계속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에 관한 진보진영의 담론을 생산하고, 실제 활동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진행해나가야 할 것임. 또 무엇보다도 흔들림 없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 입법 운동에 보다 더 주력해야 할 것임.

중점과제 5. 보편적 복지국가 향한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한국 사회 총체적 국가운영 전략 전환의 의미로서의 복지국가 비전 제시
- 복지국가 전략 추진을 위한 2012년 총·대선 유권자 운동 전개
- 새정부 출범 시 복지국가 로드맵 제시

• 주요활동 및 성과

1. 복지국가 유권자운동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4.11 총선 민생·복지 공약 요구안>, <경제·복지·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 초청 토론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분석공개>, <각 정당의 복지정책 평가보고서>,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등(2~4월)
-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입법촉구 및 대선정책 요구안>, <대선후보 3인의 국민연금 정책공약 비교 평가>, <주요 대선후보별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평가> 보고서, <주요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정책 비교·평가> 보고서, <주요 대선후보별 보육정책 비교·평가> 보고서, <주요 대선후보별 보건의료 정책 비교·평가> 보고서,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의 기초생활보장정책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12월)
-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 평가보고서> ‘복지동향’ 10월호 게재(10월),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표(11월)

2. 서울복지필름페스티벌2012 개최

- 서울복지필름페스티벌 2012 “유쾌한 탈출, 복지국가행 티켓을 끊어라” 진행(9월)
: KU씨네마테크에서 총 13개 영화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 진행, 시민 900여명 관람

• 약평 및 보완과제

- 복지국가 만들기 캠페인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의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나 410여개의 소속단체의 주요 개별이슈에 밀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설정 및 종합적

인 차원에서의 복지국가 전략수립 및 공론화 등이 진행되지 못함.

- 12대 요구안 발표 및 질의서 발송, 정당 답변 분석, 이를 기반으로 정책협약식 추진 등 정책을 중심으로 한 약속운동이 종합적으로 기획되고 추진됨.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의 답변 분석은 19대 국회에서 정치권의 입법과 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민생, 노동, 복지 이슈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고 복지이슈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음. 영화선정에서 인권영화제/장애영화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는 못했으나 매 영화 상영 시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각각의 영화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중점과제 6.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만들기

• 중기(2012-2013)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구축과 단계적 실현
- 평화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평화연대 강화와 시민행동 전개

• 주요활동 및 성과

1. 한반도 평화체제 위한 정책 제안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참여연대 정책 제안

-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 중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과 과제> 총 11개 정책, 52개 실천과제 제안(3월), 19대 국회 과제로 5·24 조치 해제 촉구(6월) 등
-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안내서 :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소책자 발간(12월)

시민사회 공동 비전 및 정책안 마련

-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 : 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개최(11월)
- 2012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통해 2012년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위한 사회합의 제안(2월), 5·24 조치 2주년 즈음, 5.24조치 해제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각계 평화회의 개최(5월)
-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2주년 기념식 및 시국회의 개최, 6.15 공동선언 이행 촉구(6월)

2. <평화에 투표하자> 등 시민평화행동

<평화에 투표하자> 캠페인

- 프레시안 공동기획 <평화에 투표하자> 연속칼럼 16회 발표
- 2012년의 선택, 평화! - 정전 59주년에 즈음한 7.27 평화선언(7월)
- <NLL(북방한계선) 쟁점과 대안(2012 수정판)>,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감축 :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멈춘 국방시계>, <주요

대선후보 한반도·외교통상·국방정책 비교 및 평가> 보고서(10~12월)

기타 시민평화행동

- 4월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관련 '남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비상 반전평화 대책회의' 개최 등
- 후쿠시마 1주년, 핵안보정상회의 대항 공동행동 추진
- 제주해군기지건설 백지화를 위한 국내국제 캠페인 연중 진행
- 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제3회 평화군축박람회 개최 등 비핵군축사업 진행

• 약평 및 보완과제

-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만들기를 위한 국내외 평화연대 형성 활동에 주력하였으나 내외부적 요인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음. 다만, 5·24, 6·15, 7·27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협력 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등을 추진함. 하반기 이후 정전 60주년 캠페인 초동모임을 진행했고 시민사회 내 공동행동 요구도 높아져 2013년도에는 공동캠페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총선과 대선 때 '평화에 투표하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혁과제, 대선이슈리포트, 칼럼 연중 기고 등 정책제안 중심으로 대응함. 또한 남북관계 주요계기별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함

발전과제 1. 회원 15,000명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 중기(2012-2014) 목표와 방향

- 가입가능성이 높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회원가입을 권유하여 회원 확대
- 회원 맞춤형 의사소통 및 참여프로그램 정례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회원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여 탈퇴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함
- 연간 가입율을 높이고 탈퇴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2014년까지 15,000명 회원 확보

• 주요활동 및 성과

1. 신규 회원모집 캠페인

- 회원가입 가능성이 높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장(집회, 문화행사 등)에서 회원가입 홍보 부스 운영, 토론회와 교육강좌 등 참여연대 주최 행사장에 회원가입 홍보물 비치, 아카데미스튜디오 강좌 수강생 중 비회원에게 가입권유 이메일 발송 등 진행
- 회원가입 권유 '내 친구가 회원이 되었어요' 캠페인 및 참여연대 운영위원 1인 3명 회원 가입권유 캠페인 진행, 회비 소액증액 캠페인 진행

2. 회원만족감과 소속감 증진과 멤버십 유지 기간 늘이기

- 신입회원 생규콜 및 웰컴팩 발송, 1년 회원 감사편지, 10년지기 회원 감사선물 발송, 회비증액 회원 감사편지 발송 등 회원 감사프로그램 안정적 진행
- 연 6회 신입회원 만남의 날 안정적 진행
- 비수도권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상반기(4개 지역) 및 하반기(1개 지역)에 진행 하였고, 지역시민사회단체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는 활동 일부 진행

• 약평 및 보완과제

- 2012.12.31 기준 회원 13,107명, 연중 가입 875명, 탈퇴 455명으로 2011년 대비 420명 증가
- 회비증액 캠페인에 234명의 회원이 참여함
- 회원가입 캠페인 중 애초 계획에서 부분실시에 그쳤는데, 미진한 부분은 차후 지속 해야 하고 새로운 방식을 계속 개발해야 할 것임

-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캠페인의 경우 분명한 성과가 있음을 데이터로 확인가능하였으나, 나머지 경우는 확인되지 못하거나 미미함
- 회원감사프로그램 및 소속감 증진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은 지체됨

발전과제 2. 참여연대 알기 쉽게 만들기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기본 콘텐츠 생산
- 활동성과를 홍보하는 다양한 기획 콘텐츠 생산
- 음해 비방 대응 콘텐츠 생산
- SNS 기반 서비스 등 쌍방향 의사소통 홍보 강화
- 참여사회 개편 및 영상자료 활용도 개선
- 콘텐츠의 기획, 제작, 배포, 관리 시스템 체계화
- 참여연대 활동 콘텐츠 표준화 및 분류체계 마련

• 주요활동 및 성과

1. 알기 쉽게 소개하는 기본 콘텐츠 생산

- 리플렛+회원가입서, 연간 활동보고서, 부서별 소개자료, 영문리플렛, 홈페이지 FAQ 등 기본홍보물의 종류 정비와 각 홍보물 별로 배포 대상 및 방법에 따른 제작부수, 갱신 시기를 정하는 등 관리 계획 마련
- 온, 오프라인 7개 백과사전 소개 콘텐츠 점검 및 보완 완료

2. 참여연대 음해 비방에 대한 대응

- 강용석 의원, 뉴데일리,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가 '참여연대가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에 참여했고, 개인신상 정보를 캐내기 위해 1천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3. 모바일과 SNS를 통한 홍보 강화

- 참여연대 트위터(2011년 5월 개설, 팔로워 17,000여 명), 페이스북(2012년 2월 개설, 친구 5,000, 받아보기 850여 명)을 통한 활동 홍보 안정화
- 모바일 환경 변화에 발맞춰 참여연대 앱과 모바일 웹페이지 제작

4. 참여사회 개편

- 표지와 레이아웃, 종이 교체 등 디자인 개선, 다양한 삶의 이야기 연재 코너 및 참여연대 20주년 특집기획 신설 등 콘텐츠 다양화 시도

5. 콘텐츠 배포 관리 시스템 체계화

- 참여연대 홈페이지 웹포스팅, 입법/소송/기사/발간자료실 운영, 트위터/페이스북/플리커(사진공유) 운영 매뉴얼, 영상파일 배포 매뉴얼 제작과 각종 내부 자료 영구 보관지침 개정

• 약평 및 보완과제

- 기본 홍보 콘텐츠는 정비되고 있으나 참여연대의 각종 활동성과에 대한 재가공과 홍보 사업은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음. 참여연대 활동의 의미와 성과를 널리 알리는 홍보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알기 쉽고, 대중 친화적인 형식으로 콘텐츠 혁신을 시도해야 함
- 홍보와 소통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시작한 참여연대 SNS는 활성화되었고, 운영관리도 안정화되었음. 월간 참여사회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와 디자인 개편을 추진함. 2013년 7월, 200호 발간 특집호를 기획할 예정
- 참여연대의 다양한 콘텐츠의 관리와 유통을 체계화하기 위해 매뉴얼을 집대성하였음. 효과적으로 관리, 유통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내부에 공유해야 함

발전과제 3. 지속가능한 참여연대 만들기

• 중기(2012-2013)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재정의 예측가능성 높이기
- 소액 재정사업 확대와 낭비요인 줄이기를 통해 월 적자폭 줄이기
- 감사프로그램을 통해 후원자들의 만족도 높이기
- 참여연대 공간을 참여와 연대, 시민문화 공간으로 재구성
- 상근자 급여의 유지·개선

• 주요활동 및 성과

1. 지출낭비 요인 찾아 비용 절감하기

-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낭비요인을 검토한 결과, 통신비 등 일부 절감
- 사무용품 등 물품 구입처를 일원화함으로써 비용절감 추가 노력

2. 후원자 데이터 관리 체계화 및 맞춤형 감사 프로그램 시작

-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1차 완료
-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입·출력 방법 및 정기점검매뉴얼 MRM프로그램으로 통합운영
- 연단위 맞춤형 감사 프로그램 기획 및 시범운영

• 약평 및 보완과제

- 재정사업은 정기 후원의밤 모금 외 소액 이슈매칭 모금도 평년수준에 머물렀음. 소액기부프로그램 개발 및 이슈매칭 모금사업은 배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함.
- 후원자 DB 1차 정리작업을 통해 후원자 관리의 기초를 다졌으나, 작업이 완료되지 못해 연동된 예우프로그램이 적극 추진되지 못했음.
- 참여연대 공간개선 TF구성과 기본계획 마련 사업은 20주년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함.

발전과제 4. 참여연대 활동력 높이기

• 중기(2012-2013)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참여연대 20년 인적 네트워크 DB 구축
- 실행위원, 자원활동가들의 참여연대 소속감 제고
-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각 활동기구의 활동력 배양
- 의사결정기구에 회원참여 확대와 정착을 통해 회원대표성 및 내부모니터 역할 강화
- 교육·연수 기회 확대, 전문간사제도 도입 등 상근역량 강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인적네트워크 DB 구축

- 역대 임원들과 자원활동가들 DB 구축

2. 교류·참여 프로그램 기획, 시행

- 임원 산행 및 신년회 개최 등으로 멤버쉽을 다질 수 있는 친목도모 프로그램 진행

3. 추천직 운영위원 제도 정착

- 추천직 운영위원 제도 정착으로 회원 대표성 강화
- 사업성과와 평가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보고자료 개선, 분과모임 활성화 지원

4. 상근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현실 수요에 기초한 상근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약평 및 보완과제

- 인적네트워크DB 구축을 위한 입력작업 1차 완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동 프로그램 추가 기획 요구됨
- 국내외 연수 기회 확대, 전문간사제도 도입 등 상근자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은 집중 논의와 실천가능한 전략 수립을 위해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환함

의정감시센터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유권자 참정권 확대 위한 제도개선
- 국회의원 의정평가, 국회 평가 체계 정형화
- 국회의원 DB사이트의 전문화·대중화
- 의정감시 정기 모니터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 강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중점과제 <2012 총·대선 정책 캠페인 및 유권자운동>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실행

2. 18대 국회 평가사업 진행

- 18대 국회 임기 중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참여한 의원 명단 공개
-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반민생·반개혁 17개 법안 선정,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보고서> 발행(2월)

3. 국회 및 정치개혁

- 비례대표 확대와 정책선거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모니터링(1월~2월)
- 공개와 기록, 표결 원칙을 훼손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비판(5월)
- <2012 대선 정치개혁을 위한 정채과제 제안> 보고서(11월)

• 약평 및 보완과제

- 상반기 총선(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하반기 대선(투표권보장공동행동) 캠페인에 주력하면서 애초에 계획했던 국회의원 DB사이트 <열려라국회> 개편이나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을 진척시키지 못함. 2013년에 지속할 계획임.
- 총선 전에 <반민생·반개혁 법안 투표 결과 보고서>를 발행하고 현역 국회의원의 재출마시 유권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의적절했음

- 19대 국회에서도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주요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의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고 SNS와 모바일에서도 보기 쉽게 제작하고, 홍보 전략도 마련할 예정임

사법감시센터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검찰의 권한남용에 대한 감시, 시민들이 지지하는 검찰개혁안 마련 및 추진
- 대법관, 헌법재판관 교체 과정에서 시민 평가 체제 구축 및 구성의 다양화 요구
-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 체제 구축, 대안 마련
- 사법감시센터 정기 모니터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 강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검찰개혁 과제 공론화 및 정책공약화

- 검찰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으로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제안, <검사장 직선제 공개토론회> 개최(3월), 전문가 칼럼기고(2~3월)
- 총선 시기, 정당과 후보자에게 검찰개혁 정책제안(공수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 및 약속운동(3월, 2012 총선넷 참여) 진행
- <2012 대선 유권자를 위한 검찰개혁 공약 평가> 보고서 발간(11월), <참여연대 검찰개혁 정책제안> 발표(12월)

2. 검찰 수사 및 인사 모니터

- <조직의 수호자 검찰, 이명박 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및 검찰권 오남용 사건 변호인 초청 검찰보고서 발간 기념 간담회 <MB검찰 4년을 말한다> 개최(10~11월)
-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12월)
-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검찰 수사 모니터링
- 부장 검사 뇌물수수, 피의자 성추행 검사, 한상대 검찰총장의 SK 봐주기 구형 지시 사건 모니터링 및 검찰 수뇌부 사퇴와 검찰개혁 촉구(11~12월, 시민사회단체 공동).

3. 대법관·헌법재판관 교체기 대응 활동 전개

- 대법관 4인의 교체를 앞두고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대법관의 다양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좌담회, <헌법재판관·대법관 어떻게 뽑을 것인가> 토론회 및 전문가 칼럼 기고(5~8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비민주적 후보추천 절차 문제제기와 후보 재추천 요구(6월)
-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4명의 판결분석 및 인사질의요청서 국회 제출 및 인사청문회 모니터링, 김병화 후보자 임명반대 인사의견 발표와 김병화 후보자 낙마 후 김소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니터링(7월~10월)

• 약평 및 보완과제

- 총선과 대선 등 2012년은 입법부·행정부의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였음. 유권자의 선택 과정에서 검찰개혁 추진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과 공약 비교·분석 평가를 진행함. 중수부 폐지·공수처 설치 등 단기과제와 검사장 직선제 등 장기과제를 분리하여 단기과제부터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장기과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슈제기와 공론화를 시도하였음. 새 정부와 19대 국회에서도 이어가야 함
-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대거 교체 시점에서 최고 재판기관의 구성이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함. 다양성에 대한 기준을 종전의 성별·대학·지역 정도에서 이념·출신(비법관)의 다양화로 기대수준을 높임. 대법원의 폐쇄적·획일적 인사 관행은 여전했으나, 인사청문회 등 검증과정에서는 기득권 옹호 판결이나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등의 문제가 폭넓게 다루어졌음
- 검찰의 주요 인사현황과 수사사건 평가를 담은 검찰보고서를 발간하였음. 2009년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부터 매년 조금씩 개선하면서 발표하고 있고, 2013년에는 이명박 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보완하여 발표할 예정임
- 시행 5년을 맞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평가 사업을 계획했으나 진행하지 못했음. 2013년에 대법원 산하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제도 최종안을 발표하면 이를 검토하고 시민사회의 평가도 진행할 예정임. 이 외에도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현황 점검보고서 등을 검토했으나 다른 사업과의 일정 조정 등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음

행정감시센터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이명박 정부의 권력운용 평가 및 정부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아젠다 발굴 및 대안제시
- 반부패·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
- 퇴직·현직 공직자이해충돌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행정감시센터 정기 모니터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 강화
- 공익제보 활성화 기여, '의인상' 위상 확대
- 공안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감시와 개혁과제 마련

• 주요활동 및 성과

1. 정부권력 운영과 공직윤리 관련 모니터 보고서 발간

-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토론회 및 이슈리포트 발행(2월)
-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2> 발행(10월), <주식백지신탁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 발행(11월)

2. 민간사찰, 디도스 공격관련 사건,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 등 현안 대응

-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관위 디도스 공격 관련 선관위 정보비공개 행정심판청구 후 비공개처분 취소 결정받음, <재보궐 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 장애 원인> 토론회(2월)
- 청와대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진상규명,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 교체, 시민사회 각계 308명 시국선언 및 비상시국회의, 국회 청문회 및 국정조사특위 운영 촉구, 토론회 <민간인 불법사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4~7월)
-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진상규명과 특별검사 임명 요구(6~10월)

3. 공익제보 지원 및 공익제보자의 밤, 의인상 확대

- 2012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 공모 및 의인상 시상과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11~12월)
-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국제전화사기사건 제보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공익신

고자 보호조치 신청 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받음, 그 외 여러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활동 진행(연중)

-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의인기금 약정(신광식 박사) 등 의인기금 추가 조성

4. 대선시기 반부패정책·수사-정보기구 개혁과제 제시

-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공동개최, <18대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시민단체 반부패 정책요구> 공동발표, <18대 대선 주요 후보의 반부패·정부투명성 정책공약 평가>보고서 발표(9~12월)
- 국정원과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는 공안기구 개혁과제> 공동발표(11월), <18대 대선 후보 정보수사기관 개혁공약 평가> 공동발표(12월)

• 약평 및 보완과제

- 정기·비정기 모니터 사업을 진행했으나, 계획했던 모니터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일부는 포기하였음.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모니터 사업은 정보비공개와 그에 따른 행정심판·소송 등으로 계획에 따른 진행이 어려워 일정이 변경된 경우도 다수 있었음. 정기모니터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아이템 개발 및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함
- 정권말 이슈대응 요구가 급증(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활동 - 행정심판·행정소송, 민간인 불법사찰) 하여 정기 사업진행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음
- 반부패제도 입법활동은 성과가 미진하여 2013년 사업으로 연기하였고, 대선시기 반부패정책제시 사업만 진행하였으며, 향후 구체적 입법활동이 필요함
-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짐. 공익제보자의 밤과 의인상 시상은 제3회 행사를 진행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예우행사로 자리잡았음.
- 공안기구 개혁활동은 국정원 개혁과제 마련했으나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 준비된 개혁과제 제시 후 입법화는 장기적인 과제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공익법센터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기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하고 기본권 옹호 및 확장을 위한 법제도개선 추진
- 표현의 자유 옹호를 위해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의 문제제기와 정책 대안 공론화
- 공익소송의 사회권 영역으로의 확장계획에 대한 평가 및 사업 확정
- 2012 총·대선에서 표현의 자유 중장기 발전 기본 방향 제시
-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연수 실시
- 공익법제개정운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 확정

• 주요활동 및 성과

1. 표현의 자유 옹호 관련 3가지 공익소송 결실을 거둠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44조의 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8월)
- 범죄혐의 사실과 무관한 무차별적인 이메일 압수 손해배상소송 승소(9월)
- 네티즌의 신상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경찰에 곧바로 제공한 포털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10월), 판결 후 각 포털사에서는 경찰의 요청이 있더라도 바로 응하지 않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조치를 시행함
- 위 3개 판결은 주간지 '한겨레21'의 <2012 올해의 판결 및 최고의 판결>에 선정됨

2.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 모니터링 및 대응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규제강화 비판 연속칼럼 <SNS 애정남녀> 발행(1~2월)
- 인터넷·통신사의 이용자 통신자료의 수사기관 제공 여부 확인 및 소송인단 모집 캠페인 시작(11월~)
- 정부비판 발언 시민에 대한 정부기관의 협박성 명예훼손 고소 비판 논평 수 차례 발표(제주해군기지 관련 '해적'발언 활동가, 국정원 사찰 폭로 김미화 씨, 4대강사업 비판 학자, 대통령 비난 현직 군인 등)

3. 표현의 자유 관련 입법운동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동발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공동의견서> 발표,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6대 정책> 보고서 발표(5~11월)
-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찬성하는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보고서 발표(7월), 모욕죄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개정안 입법청원(9월)
-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 제약하는 모욕죄와 업무방해죄 개정(삭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입법청원/발의(8월)

4. 공익변호사 양성과 공익소송 지원

-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새순기금' 조성 및 후원의 밤(2월)
- 로스쿨 졸업생 대상 공익변호사 연수 실시 및 연수 참가자 3명 수료함(4월~10월)

5. 기타

- MBC, KBS, YTN 등 언론인들의 공정언론쟁취 파업 연대 활동, '공정언론 공동행동' 참여, <공정언론쟁취 여의도 희망캠프> 및 <MBC 구하기 시민 무한도전> 참가(3~7월)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대한항공, 도시철도공사 등 장애인 웹접근성 차별행위 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11월)
-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내용 수정권한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및 칼럼 기고

• 약평 및 보완과제

- 지난 5년 동안 기획하고 진행한 공익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음
-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사법심사로 전환하자는 시민사회의 합의를 마련하였고 이를 총선,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여 일정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통신심의 폐지에는 이르지 못함
- 통신자료제공 확인 캠페인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많은 호응을 이끌지는 못했음. 2013년에 보다 집중적인 캠페인이 필요함

사회복지위원회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보편적 복지'의 구체화 방안 마련 및 제도화
- 총대선 과정에서 복지정책 쟁점화, 공약화
- 새 정부 출범 시 복지국가 비전 및 로드맵 제시, 정책화 추진

• 주요활동 및 성과

1. 중점과제 <보편적 복지국가 향한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 사업 진행

2. 사회복지 개혁과제 수립 및 새로운 의제개발

- 보육·방과후 돌봄·장기요양 등 분야별 공공성 확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8월)

3. 보편적 복지 구체화를 위한 핵심 캠페인

- <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 발표,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토론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은 무엇인가', '다양한 육아지원 인프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개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노동환경개선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및 대선정책 요구안 발표, 대선캠프 초청 보육정책담당 간담회(6월~11월)
-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방안 모색, 국민연금기금 활용방안 모색,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및 11대 정책과제 5대 실천과제 발표, <대선후보 3인의 국민연금 정책공약 비교 평가> 보고서(10~11월)
- <영리병원 도입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 등 의료민영화(영리병원) 정책추진 감시 및 대응활동

4. 단행본 및 월간 <복지동향> 발간

- 단행본 <대한민국 복지국가 - 회고와 전망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누구를 위한 최저생계비인가?> 기획 및 발간(발간은 각각 2013년 1월과 2월)

- 정기간행물인 월간 복지동향 매달 발간

• 약평 및 보완과제

- 19대 국회 법안 제출 및 모니터링은 별도의 법안 제출이 아닌 관련 법안 모니터링으로 대체하는 등 국회대응 사업이 원활이 진행되지 못함
- 총선 대응 과정에서 6대 원칙에 따른 27개 기준 등의 정책평가 지표와 세부기준을 사전에 밝히고 발표한 <정당의 복지정책공약 평가 보고서>는 선관위의 직접적인 경고로 인해서 평가방식으로 정량(등급, 점수부여)에서 정성 평가로 수정함에 따라 평가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의 입장과 활동을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공공인프라 확충 전반에 대한 입장 및 개선이 아닌 보육분야에 치중하여 활동함
- 한동안 노동·시민사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부주도로 진행된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하여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대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탁적 개념에서 사회연대적 개념을 강조하고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시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소속단체들의 결합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초기의 사업계획 및 추진이 과제로 남음

노동사회위원회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노동시장 개혁과제 수립 및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 총대선 과정에서 노동시장정책 쟁점화, 공약화, 새 정부 출범 시 정책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 및 근로조건 개선
- 노동사회위원회 회원 확대 및 재정자립화 추진

• 주요활동 및 성과

1. 노동시장 개혁과제 제시 및 총·대선관련 노동분야 정책제안 및 평가

-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보호 확충, 노동권 강화 3대 분야 10대 정책과제 제시한 <노동에 대한 보호, 인간존엄성 확보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보고서(3월)
- <주요 대선후보별 최저임금정책 비교·평가> 보고서, <노동권 관련 주요 대선후보 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11~12월)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촉구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정규직과의 차별을 고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1 : 광역자치단체> 이슈리포트 발표(7월)

3. 생활임금 도입

- 실질적으로 생활을 보장할 수준의 '생활임금'체제 도입운동과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 가능성> 토론회 개최(8월)
- 서울시 노원구 및 성북구 소속 저임금 노동자 대상 생활임금체제 도입하기로 노원구 및 성북구청장의 결정을 이끌고 이를 공동발표하는 <생활임금 우선 적용 방안 발표 - 노원구 성북구 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개최(11월)

4. 쌍용차, 현대차 등 현안 대응

- 경향신문 공동기획기사 시리즈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5회, 6월)와 <쌍용차, '죽음의 행진'을 멈춰라> 연속칼럼(10회, 6~8월),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공동개최(6월)

- <현대차 불법과건 관련 대책마련 좌담회> 공동개최(10월), 현대차 불법과건 관련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과건법 위반 혐의 형사고발(12월, 고발인 법학교수 35명)
- 고용노동부에 <쌍용자동차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현황 공개질의서> , <현대차 불법과건 관련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현황 공개질의서> 제출과 답변에 대한 반론의견서 제출(5월, 11~12월)

5. 기타

-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모니터 보고서> 발표(2월), <노동자의 건강과 정의 공개강좌> 공동개최(4월)

• 약평 및 보완과제

- <노동시장 개혁과제 보고서>를 토대로 총·대선과 국회에 노동정책을 제시하여 대응하였음. 노동사회위원회 차원에서 개혁과제를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정치권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노력은 미진함. 노동시장 개혁과제의 실현과 함께, 산재, 정년연장, 노조전임자 임금 등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노동시장 개혁과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과제에 대한 입장정리 및 대응이 필요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1 : 광역자치단체>와 생활임금 운동은 여론의 반응이 좋아 비정규직과 저임금 등에 대한 여론과 언론의 관심을 확인함. 생활임금은 조례 제정을 비롯한 후속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시키고자 함

민생희망본부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4대 가계부담(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이자 부담) 완화 운동에 집중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 살리기 캠페인 진행
- 금융권 각종 수수료, 이자폭리 문제 등을 다루는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캠페인 진행

• 주요활동 및 성과

1. 중점사업 <4대 가계부담 완화>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실행

2. 부동산·재개발 정책 개선 및 서민주거 안정 활동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조례개정 촉구 기자회견> 공동개최 및 서울시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4월) 등을 통해 상반기에는 뉴타운·재개발 개혁에 주력
-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서 제출(7월), 각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세입자 보호에 주력하였고, 휴면 상태였던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활동을 복원하여 '닝마공동체'에 대한 강남구청의 강제철거에 집중 대응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도 개최(11월)
- 닝마공동체 인권유린 사태를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제1호 진정으로 제출함으로써 연말 서울시가 강남구청의 인권유린 사실을 공식 확인함

3. 중소기업·자영업자 살리기 캠페인

- 농심(주)의 대리점(특약점) 노예계약 횡포와 불법행위 공정위 신고(7월), 한국타이어 대리점의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11월), 웨미리마트(BGF리테일)와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 공정위 고발(10/12월) 등
-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11월), 불공정행위 근절 및 가맹점주·자영업자 생존권보장대회(12월) 등을 통해 대선 전 가맹점 이슈 공론화

4. 공공서비스·서울시 관련 활동

- <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 위기, 원인과 배경, 그 해법을 찾아라> 토론회 공동개최 및 서울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특혜의혹 규명 위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청원서 제출(4월), KTX 민영화 저지범대위에 참여하여 민영화 반대 운동 전개

- 민생경제 정책을 주제로 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6개월 평가와 전망 토론회> 개최(4월) 등 서울시의 민생·경제정책 모니터링
- 노사갈등현장과 재개발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경비업체와 용역의 폭력·불법행위와 관련한 <폭력용역 피해사례 보고대회 및 경비업법 개정방안 토론회> 공동 개최 및 용역폭력 근절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입법청원 진행(8월)
-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관련해서 KT의 국제전화 사기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4월) 진행. 결국 감사원은 2013년 1월 'KT이 관련 전화가 국제전화는 아니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고 방통위를 징계함.

• 약평 및 보완과제

- 4대 가계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꾸준히 활동한 결과 상당한 이슈화와 대책 수용의 성과가 있었지만, 교육비 경감 대책들에 비해 주거, 통신, 금융소비자 이슈 대응은 여전히 미진한 면이 많고, 서민들의 절실한 기대에 비하면 실제 변화가 이뤄지는 속도도 매우 더디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임. 또 서울 9호선 요금 문제, 서울시의 각종 민생경제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도 긍정적이나 서울시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 반값 등록금 문제가 등록금 지원 예산 증가 및 국가장학금 지급으로 이어진 성과가 있었지만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실현되지 못했고, 사립대 비리, 적립금 문제, 파행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학구조개혁 등 세부 이슈들은 해결된 것들이 거의 없기에 향후에도 꾸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임.
- 시민경제위원회와 함께 1년 동안 경제민주화운동을 수행했고, 그중에서 특히 2012년 내내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이슈화하고, 하반기에도 가맹점 이슈를 집중 부각시킴. 그를 통해 전국의 자영업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재벌·대기업에 의한 심각한 상권 침탈과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자영업자 당사자들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 KTX 민영화, 지하철 요금 9호선 폭등 위기, KT의 제주 7대경관 관련 국제전화 사기 사건처럼 주요 공공서비스와 공공기관과 관련된 문제들은 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므로 앞으로도 주요 공공서비스 민영화 문제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시민경제위원회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금융공공성 확보 운동 지속 및 확장, 정부의 금융정책 감시
- 재벌·대기업 관련 사업 준비작업 착수 및 실행
- 가계부채·물가 관련 사업 지속 및 확장
- 정부 경제정책 모니터 및 대응

• 주요활동 및 성과

1.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진행

2. 저축은행 책임 규명과 근본 해결책 촉구

-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 책임 관료 26인> 보고서 발표(3월)와 저축은행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5월) 등을 통해 저축은행 사태의 정상화를 위해 꾸준한 대응을 전개함.

3. 론스타 시민감시 및 소환운동

- 론스타 인사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에 이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 심사를 잘못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2월)하고, 론스타와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활동 전개
-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2단계를 선포하고(5월) 외환은행을 통해 불법이득을 누린 론스타와 이사진을 상대로 한 '론스타 관련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제기(7월)하고 소송 진행 중
- 론스타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에 대한 반박 및 국가소송과 관련한 중재 의향서 전문 공개(8월)

4. 금융정책 감시와 서민금융보호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공동 토론회(12월)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각계 전문가 연속 간담회 진행(하반기)

- 키코 사태, 론스타 사태, 저축은행 사태, 금융감독체계 개혁 등의 이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과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야당 정무위 의원·보좌진 연속 간담회 진행(하반기)

• 약평 및 보완과제

- 재벌개혁 사업은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부상한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특히 정책 및 실무를 담당해 진행해왔음. 또 오랜 논의를 통해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운동 전개에 필요한 정책의 골격을 발표하고 공론화시키고 있으나, 과거의 재벌개혁 전문 단체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를 보임. 더 많은 전문가들과 더 많이 연구하고, 또 더욱 일상적인 모니터링과 기동적인 대응이 없이는 각계 국민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넘어 재벌·대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임. 이에 박근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응하는 시민경제위원회 차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일상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저축은행과 론스타 사업은 국회의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총선과 대선을 맞는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지만, 저축은행 사태와 론스타 사태의 전말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하였고, 또 끈질기게 추적·대응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초안을 완성하여 곧 발의할 예정이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주도적으로 제기하지는 못했음. 2013년에는 금융정책,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개입을 더욱 확대할 예정임.

조세재정개혁센터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조세정책 및 국가재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축적
- 복지국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운용 방향 제시 및 담론 생산
-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조세정의 실현, 민생·복지국가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제시
- 이명박 정부 재정운용 평가와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 주요활동 및 성과

1. 조세재정개혁센터 출범 및 센터 활동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 경주

- 조세재정개혁센터 출범 및 기념 심포지움(5월) 개최 : 조세정의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의 전통을 잇는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성공적 출범과 함께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실행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논의 및 현안 대응 구조를 안정화함.

2. 공평과세와 부자증세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운동 전개

-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주제로 한 <재원분야 정책방향 정당초청 토론회> 개최(3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2012년 세법개정 토론회> 개최 및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 비판 입장 발표(8월)
-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및 파생금융상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입법청원(2월),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5월),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베스트 6> 보고서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개정법률안 입법청원(11월)
-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후보의 조세재정 정책공약 평가 연속 논평 발표(11월)

3. 국가재정 관련 모니터링과 예산운동

- 상반기 예산편성 시기 때부터 시민운동의 개입을 만들어보고자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6월)

-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지출 확대에 부응 못하는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비판 논평, 민생대책과 복지확대 의지 없는 2013년도 각 부처 예산 요구안 비판 논평, 복지재정 위협하는 2013년 정부 예산안 비판 논평 등 국가재정운영편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판적 시민 개입을 확대하는 활동 전개(7월~9월)

4. 기타

- 대화마당 <살롱 세(稅) - 대한민국 시민, 세금을 말하다> 2회 개최(12월)
- 시민강좌 <세계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 4강 진행(8월)

• 약평 및 보완과제

- 조세재정개혁센터가 각계의 주목 속에 출범하고, 각종 토론회, 집담회, 논평, 시민교육 등의 각종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나간 것은 의미가 있음. 특히 재벌대기업 실효세율 분석 이슈리포트의 경우, 계속해서 언론에 인용되고 공론장에 회자되고 있는 등의 큰 성과가 있었음. 앞으로도 시기적절한 내용이 담긴 리포트의 발간과 토론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하겠음. 또 조세정의, 재정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의 연구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협력 틀도 마련할 예정임.
- 다만 전반적으로 각각의 이슈에 대해 센터 차원의 논평이나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음. 이는 센터 활동의 초창기 상황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더 정교한 대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라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또 ‘부자증세 베스트 6’과 관련된 리포트를 발표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모두 제출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었으나, 실제 총선·대선 국면에서 제대로 된 이슈화에는 실패했고, 정치권의 적극성을 전인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임. 실효성 있는 부자증세 이슈를 다시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과, 실제 부자증세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대중적 호소력과 동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 반면, 예산안 대응은 비교적 미진했던 바, 세입과 세출 모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실무진을 더 확보한 만큼 더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임. 또 예산안 대응은 그 성격상 각계각층의 전문가, 당사자와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예산안 공동 대응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평화군축센터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만들기 캠페인 집중
- 비핵군축을 위한 평화연대 확대와 강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중점과제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만들기> 실행

2.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활동

-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중단과 평화적 해결 촉구 시국회의, 2012 강정마을 생명평화 활동가대회, 강정집중방문의 날 9회 진행, 강정평화대행진 제주도보순례, 구럼비발과 반대 촛불집회, 제주해군기지공사중단 촉구 언론광고 등(연중)
-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 왜곡, 오도하는 정부와 해군 정부와 해군의 거짓말 시리즈> (3월),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보고서(11월)
- 제주국제평화회의(2월), 강정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국제인권단체들 공개서한 발송 (3월), 제주해군기지만대 국제행동주간(9월) 등 국제연대 활동
-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를 계기로 제주해군기지 이용 선박 항로, 범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침범 등 환경파괴 문제점 공론화(9월)
- <쌍용·강정·용산 SKY공동행동> 시국회의(6월), 2012생명평화대행진와 <함께살자 농성촌>(10~12월) 공동진행

3.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구성(2월) 및 <핵안보정상회의 대항 주간>과 <핵 없는 세상 실현 위한 아시아지역 연대> 선포, 핵안보정상회의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Nuclear Industry Summit) 항의행동 등(3월)
-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국제포럼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말하자>, 핵안보 정상회의 대항행동 기획 연속강연 등(3월)
- <2012 핵군축 보고서> 발행(3월)

4. 천안함 침몰 사건 2주기 대응

- 초정파적인 천안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 19대 국회, 대선 과제 과제로 제안

5. 한반도/동북아 비핵군축 기획사업

- 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우리의 세금을 무기 대신에 복지에> 공동주최(4월)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국제네트워크'(GPPAC) 동북아시아 지역운영위원회 회의 참가 등(7월)
- <제3회 평화군축박람회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프로그램으로 <몹쓸 나쁜 비싼 무기 전(展)>,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시민제안전>, 이야기마당 5회, 참여마당, 공연/영상마당, 판매마당 등 공동진행(9월)
- 제3회 아태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국제워크숍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화와 평화만들기 :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개최(11월)

6. 국방정책 모니터링

- 정권 말기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 강행 추진 관련 집중 대응
- 한일군사협정 체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등 한미일 삼각동맹 관련 토론회, 정보공개청구, 군사훈련 반대 직접행동 등
- 2013년 국방예산, 군복무기간 단축, 미사일방어체제(MD),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등 현안대응

7.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 : 반핵발전소 연대활동

- 후쿠시마 핵재앙 1주기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요코하마 선언(3월)
- 고리원전 1호기 등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핵발전 신규건설, 초고압송전탑 건설 등 대응
- 핵 없는 사회를 원하는 공동행동의 날, 1인 시위, 탈핵카페 등 다양한 직접행동 진행
- 국제세미나 '세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정책 현황과 한국의 파이로프로세싱' 진행(11월)

8. 기타

- 평화권 논의를 국내 시민사회에 소개하고 아래로부터의 평화권 도입을 위한 활동

전개, <원탁 워크숍>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 제주 강정, 평택 대추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 평화권리 선언 도출(10~12월)

- <동북아 신냉전과 평화운동 : 안보에서 안전으로>(국문, 영문)단행본 발간(1월),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3월), 19대 국회 2012년 입법과제 및 청문회과제 발간(6월)
- 아동군사훈련 중단 촉구, 군대 SNS 지침 등 안보의 민주적 통제 요구
- [2012 평화학교] 38선 아래 '레알' 청년들에게 총 7강 진행(2~3월), 지구촌이야기마당 3회 진행
- '캄보디아 지뢰·확산탄 피해 생존자로부터 듣는 고통 그리고 희망' 기자회견, 강연 등 진행(3월)

• 약평 및 보완과제

- 제주해군기지사업 저지운동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화를 막는 시발점인만큼 전국대책회의 출범(2011년)을 통해 참여연대는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공론화하며 저지하고 있음. 제주해군기지사업의 안보, 환경, 인권문제 등 종합적인 문제제기와 다양한 시민행동을 전개함.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에 있어 군비증강, 안보의 문제를 일반 시민이 납득하기 쉬운 측면을 부각시키고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저지운동의 지지기반을 확대, 지속함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과 세계군축행동의 날, 평화군축박람회, 아태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국제워크숍,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등 다양한 비핵군축 캠페인 진행을 통한 국내외 평화군축연대를 확대하고 강화함
- 시민의 참여와 접촉을 넓히기 위한 시민참여프로그램, 대중사업을 꾸준히 시도하며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평화권 논의 등 새로운 영역도 시도함
- 국방외교통일 정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과 정책대응 전개, 천안함과 NLL, 제주해군기지사업, 한일군사협정, 군복무기간 단축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함
- 기획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각각의 목표했던 바를 일정 수준 달성함.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토대 만들기 캠페인의 일부분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과제라는 일관된 메시지 전달하기 위한 기획이 보완되어야 함
- 연초 기획된 사업은 아니었지만 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살자 농성촌'을 진행, 중앙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지역 노동/평화 현안의 당사자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담아내는 장과 기회를 마련함

국제연대위원회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 한국 ODA정책의 질적 개선 촉구
-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강화
- 한국 정부의 아시아 외교에 대한 감시 활동의 전형 마련

• 주요활동 및 성과

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 한국 ODA 정책의 질적 개선 촉구

- <2012년 ODA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서>(1월), <19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15대 ODA 개혁과제>(4월), <제18대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 한국 ODA발전을 위한 제언>(12월)
- <토건국가 한국의 개발협력 확대와 기업의 참여> 보고서(6월), <민관협력 통한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 득인가 독인가> 보고서(9월) 등 발간
- <한국의 ODA, 그리고 민주주의> 정책토론회 개최(9월) 및 국회 파트너십 토대 마련
- CNK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과정에서 카메룬이 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 성명 발표 등 원조를 자원, 해외시장 확보 수단으로 삼는 자원외교의 문제점 제기

2.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강화

-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 주최로 광주아시아포럼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와 감시>,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워크숍> 개최(5월)
- 제3회 발리민주주의포럼 대항 시민사회포럼(11월), ANFREL이 주최한 아시아 선거 이해관계자 포럼 참석(12월), 리우+20 한국민간위원회 활동
- <강좌> 아시아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총 7강 개최(성공회대 MAINS와 공동)(10~11월)
- 스리랑카의 킬링필드, 한국의 노동 역사를 알려줬던 무니르 등 아시아 칼럼 연간 11편 발행

3. 국제이해 교육과 국제이슈 대응

- <지구촌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야기 마당> 3회 개최
- <강좌 : Rio정상회의, 이면과 진실> 진행(1월)

4. 유엔 애드보커시(advocacy) 활동

- 유엔에 인권침해 관련 진정서 7건 발송
- 한국 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출마 공약 관련 입장 발표(11월)
- 한국 정부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심의에 대응해 NGO 보고서 발행, 주한 외국대사관들과 간담회, 입장, 칼럼 발표 등(4, 10월)

• 약평 및 보완과제

- ODA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가이드라인 없이 급증하는 민관협력, 토건사업 중심의 ODA 이행 등 질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책제언 역할을 왕성하게 해냄. 정책 실현을 위한 대국회, 대정부 활동, 대시민 캠페인이나 직접행동을 병행하고자 함
- 광주아시아포럼, 발리민주주의포럼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참여연대 및 한국 시민운동 사례를 공유하고 아시아 시민사회운동에 기여했으나 사법감시운동의 아시아 네트워크 구성, 민주주의 인덱스 개발 등의 시도는 좀 더 면밀한 검토 하에 추진하고자 함
- 아시아 칼럼 정례화, 국제성명 연명 적극 참여 등의 방침을 통해 아시아 연대 강화를 위해 곧장 시행 가능한 일을 시작함. 성공회대 메인즈 학생들이 강사가 되어 진행한 아시아강좌는 아시아 연대의 새로운 정형을 마련했고 수강생 만족도도 높았음.
- 유엔 애드보커시 메커니즘을 통해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애드보커시가 시민운동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인식되는 계기 마련
- 아시아 외교 감시 추진과정에서 아시아 외교 정책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어 최소 대응함. 그러나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정책 감시가 필요한 만큼 좀 더 면밀한 실태 감시 방법을 모색하는 내부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아카데미 느티나무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시민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
- 참여연대 시민교육 역량 강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시즌별 강좌 진행

- 4개 시즌별 강좌(총 50개)를 안정적으로 진행함
- 강좌 수, 강좌수익 등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2. 강좌 기획 및 운영의 새로운 시도

- 그동안 굿모닝세미나, 생활문화학교에서만 진행하던 워크숍 형태의 진행방식을 민주주의학교에도 적용·시행하였음. 이들 강좌에서는 참여자들과 강사들이 좋은 호흡을 이루며 새로운 배움의 에너지와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음.
- 열성참여자 그룹인 느티나무지기 모임 안정적인 운영 및 강좌기획, 평가, 진행 참여

3. 아카데미 실무진과 활동기구 간사들의 시민교육 역량강화

- 참여연대내 활동기구들이 주관하는 <민주주의학교>강좌의 기획, 진행과정 지원
- 참여연대내 활동기구 교육담당자들의 기획,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 2회 상근자 교육프로그램(워크숍, 직무교육) 진행
- 시민교육의 흐름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아카데미 상근진 내부세미나

• 약평 및 보완과제

- <민주주의학교>를 포함한 아카데미 교육 목표와 내용, 방향, 방법 등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상근자들의 교육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발성 강화와 동기부여가 더욱 필요함

참여사회연구소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시민적 공화주의 담론 및 시민정치, 시민참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활성화
- 복지국가의 한국적 착근에 관한 이론적 토대 마련
- 시민교육 프로그램 강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

- 한반도의 분단 현실 속에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내 대화마당>과 국제심포지엄 <분단과 복지 : 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를 개최하고, 평화국가와 복지국가의 담론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시민사회운동진영과 학계에 '평화복지국가'라는 화두를 제기함

2. 단행본 발간

- 2011년 개최한 국제심포지엄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의 연구 내용을 보완·발전시킨 단행본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노동과 시민의 연대를 주제로 한 단행본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2030세대의 희망, 일, 연애와 결혼, 세상 바꾸기를 주제로 한 단행본 <2030세대> 발간

3.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발간 및 10주년 연속포럼 개최

-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창간 10주년 기념 '시민적 진보와 한국 사회'를 주제로 한 연속포럼 3회 개최를 통해 10년간 구축한 학문적 의미를 정리하고, 경제, 정치 등 실천적 영역에서의 과제를 제시함.
- '시민적 진보의 철학과 담론'을 특집으로 한 <시민과 세계> 21호, '한국 선거의 불편한 진실'을 특집으로 한 <시민과 세계> 22호를 발간함

4. 시민정치시평 발행 및 선거 평가 포럼 개최

-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루는 시민정치시평을 주 2회 안정적으로 발행해 프레스시안에 공동게재함

-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직후 포럼 <4.11 총선과 한국 정치 변동>과 <18대 대선의 의미와 한국 사회 변동> 개최함

5. 시민교육 사업

- 교사직무연수 <키워드로 이해하는 한국 사회> 개최,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재벌 공화국을 넘어> 주관.

• 약평 및 보완과제

- 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를 주제로 한 국내 대화마당과 국제심포지엄은 학문공동체나 시민운동 현장에서 복지국가와 평화국가를 주장하는 각각의 연구자, 운동가 간 본격적인 정책 대화를 시도하는 장이 되었고 유기적인 인적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초가 되었음
- 최근 몇 년간 단행본 발간이 부진했는데 2012년에 여러 권의 단행본을 준비하고 발간하게 된 것은 연구소의 연구력을 자극하고, 연구 성과를 외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
- 시민적 공화주의 담론 및 시민정치에 대한 연구는 조직역량의 한계로 본격화하지 못하고, 시민정치시평 발행, <시민과 세계> 10주년 기념 연속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된 포럼 <시민적 진보와 시민정치>, 총선 및 대선 평가 포럼으로 소화함
- 시민정치시평은 201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발행횟수가 130회에 달해 시민정치시평 및 참여사회연구소의 인지도 증대에 기여함. 계몽적 성격의 사실형 시평을 지양하고 보다 대중 친화적인 문체와 내용으로 집필하고, 국제, 경제, 문화 분야의 필진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음
- 대선 직후 개최한 포럼 등은 선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학술적·경험적 분석과, 시민사회, 노동계의 관점을 두루 공유·토론함으로써 시민정치를 둘러싼 담론 형성 및 지향점을 구축하는 데 기여함
- 교사직무연수는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만큼 인기가 많았고, 수강생들의 만족도도 높았음. 하지만 취지와 사업목표, 후속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부재한 채 관성적으로 진행해 온 한계가 있고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이 커서 시행을 일시 보류하고 재검토기로 함

시민참여팀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와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행사 진행 및 정례화
- 자원활동가의 자긍심과 유대감을 높이고, 자원활동 운영시스템 안정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더 많은 회원과 시민을 만나는 다양한 계기 마련

- 회원봄나들이 및 가을여행 진행
- 서울 서촌 및 정동지역 역사탐방 연 4회 진행
- 한겨레출판 공동기획 '저자와의 만남' 연 3회 진행
- <환경영화제 다시 보기> 연 8회 진행 및 서울환경영화제 회원단체 관람 진행
- 청소년 탐방 등 참여연대 탐방프로그램 30여회 진행

2. 카페통인 외부이용 개방 및 전시공간 활용

- 2012년 6월부터 카페통인을 전시회가 가능한 공간으로 일부 개선함. 그 후 약 7개월간 15회 내외의 회원, 강좌수강생을 포함한 시민예술가들의 전시회 진행함
- 2012년 4월부터 카페통인 운영시간 외 시간대 소모임 장소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대관시작함. 약 9개월간 50여회 내외 회원 및 일반시민들의 독서모임, 문화행사, 공부모임 등의 공간으로 이용함

3. 자원활동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자원활동가 소개 인터뷰 연속기사 웹사이트 게재(18명 인터뷰)
- 자원활동가 감사의 날 행사 1회 진행 및 활동종료 자원활동가들에게 감사선물 및 카드 제공
- 연 4회 자원활동가 신규 정기모집 및 수시모집 안정적 진행

• 약평 및 보완과제

- 회원을 포함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더 많

- 은 시민들이 참여연대와 접촉하는 기회를 넓혔음
- 카페통인의 저렴한 비용의 소모임 대관과 전시공간 이용을 통해서도 시민과 참여연대간의 접촉면을 넓혀 '시민의 놀이터'로 다가가고 있음

정책홍보팀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전체 사업 목표관리를 위한 분석 작업과 관련 시스템 구축
- 총·대선 시기 한국사회 개혁과제 여론화·정책화 사업 진행
- 2014 참여연대 20주년 사업 기획

• 주요활동 및 성과

1. 1기 회원모니터단 운영

- 회원들과 소통강화를 위해 2011년에 새롭게 도입한 <500인 회원모니터단>의 2년차 프로그램을 진행함. 1기 회원모니터단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임기 동안 연 4회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정치·사회 현안과 참여연대 활동 방향과 입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음.

2. 입법/소송/발간/기사 자료실 구축

- 입법 활동과 소송 대응, 정책자료 발간은 참여연대의 주요한 활동 방식임. 참여연대의 입법, 소송, 정책 활동을 시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년 여에 걸쳐 홈페이지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음.

3.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 <고장난 나라 수선합니다> 발간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한국 사회 개혁과제를 총정리하여 총선 전 2월에 정책자료집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 발간을 기획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음. 또 대선 전 12월에는 시민들이 참여연대 정책 제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행본 <고장난 나라 수선합니다>를 발간을 기획하고 2013년 1월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음.

• 약평 및 보완과제

- 활동 평가를 위해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분류 표준안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음. 2013년에는 참여연대 활동 분류 표준안과 평가의 항목을 확정해야 함.
- 참여연대 자료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새 지침에 따라 자료를 관리하고 있음. 2013년에는 자료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역대 영구보관자료의 재정리 작업을 시작해야 함.

참여연대 창립 이래 생산한 파일, 인쇄물, 영상, 사진자료를 정리(혹은 DB화)하고, 2014년에는 자료실 이전, 통인동 사옥 내 자료 전시가 완료되도록 해야 함.

- 2012년에 홈페이지 내에 구축한 입법/소송/발간자료실의 운영을 안정화해야 함.
- 회원모니터단 운영은 안정화되었음. 2013년 초에 2기 회원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정기 설문 결과를 분석해 회원 의견 추이를 파악해야 함.
-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 자료집, 단행본 <고장난 나라 수선합니다> 발간에 이어 2013년에는 참여연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출판물들을 기획해야 함.
- 참여연대 20주년위원회(가칭) 구성안을 마련하고, 기념사업의 방향과 과제를 정리했음. 2013년에는 각종 기념자료 편찬, 참여연대 장기비전 수립, 20주년 기념행사, 통인동 사옥 공간 개선 등을 위한 기획논의를 시작해야 함

운영기획팀

• 중기(2012-2013) 목표와 방향

- 자산 관리 효율화 방안 찾기
- 재물 조사를 통한 물품 관리 강화

• 주요활동 및 성과

1. 자산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 비영리민간단체, 재단법인 등과 관련된 법규 검토
- 자산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20주년 기념사업에서 집중 논의)

2. 사무기기, 가구 등 현물 관리 강화

- 정기적으로 재물 조사 실시
- 물품 일련번호제 도입
- 감가상각 주기에 따라 교체시기 정하고 시행

3. 『참여연대 총람』 발행

- 내규, 지침, 매뉴얼 등의 변천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취합하여 정리함. 2013년 총회 직후 『참여연대 총람 2013』 발행 예정

• 약평 및 보완과제

- 사무실 운영(하드웨어/인적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애쓴 한 해였고, 큰 무리 없이 운영되었음.
- 전체간사회회의는 여름휴가 이후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못했으므로, 정기성을 확보해야 함.

연대활동

○ 2012년 주요 연대활동 평가

총대선 유권자 참여를 위한 연대

총선에서는 '기억, 약속, 심판'을 모토로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2012총선유권자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뽑지 말아야 할 140인> 심판명단 발표 등 심판운동과 유권자가 선정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약속운동을 벌였음. 정책에 따른 심판운동과 약속운동은 새로운 시도로서 후보자 선택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음. 그 외에도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선거를 축제로, 유권자 투표혁명 개념 찬 콘서트>개최, <유권자 투표참여 호소>기자회견과 투표약속 및 인증샷 운동 등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면서 투표 독려 활동을 하였음.

대선시기에는 투표권 보장을 위해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관련법 개정안 입법청원, 토론회 개최, 1차(10만명), 2차(5만명)에 걸친 국민청원,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 운영 및 제보접수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음. 비록 입법화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투표권 행사에서 배제당한 유권자를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의미가 있음.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연대

2011년 발족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에서 4.11 총선 대응으로 복지분야에 관한 정당 초청토론회, 정당에 질의서 발송 및 답변분석, 정책협약식 등 정책을 중심으로 한 약속운동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였음. 그러나, 소속단체의 주요 개별이슈에 밀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설정과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복지국가 전략 수립 등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음. 또한,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노동, 여성, 의료, 장애 등의 각 분야 소속 단체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맡아서 진행한 복지영화제인 '서울복지필름페스티벌 2012'을 개최하였으며, 영화라는 매체를 통하여 복지 이슈 확산에 기여하였음.

금융공공성 확보와 서민경제 개선을 위한 연대

2011년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활동을 발전시켜 여러 서민단체, 금융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하여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서민금융보호, 금융공공성 강화, 서민경제 살리기 활동을 전개하였음. 특히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파산법, 과잉대출규제법,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등 서민금융보호 6법을 발표하고 청원하고 의원 발의를 진행하여 총대선 국면에서 가계부채와 이자 폭리 문제, 서민금융보호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기여하였음. 또 '빚을갚고 싶은사람들(빚갚사)이라는 채무자 조직 결성을 지원하고 채무자 친화적 채무조정제도의 신설을 역설하고, 실행위원들이 <약탈적 금융사회>라는 책을 펴내 약탈적 금융의 문제점을 널리 홍보한 것도 성과임.

재벌·대기업들의 특혜와 탐욕을 규제하기 위한 연대

2012년 1년 내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중소기업인, 청년, 서민 등 경제주체들,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하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운영함. 이를 통해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을 규제하고 특혜를 타파하기 위한 다종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음. 특히 노동이 존중받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동단체와 적극 연대하였고, 또 중소기업인 및 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전국의 중소기업·가맹점주·자영업자들과 광범위하게 결합하였으며, 경제민주화2030연대 활동을 적극 지원한 것도 의미가 크다 할 것임.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각계 당사자·국민들의 경제적 생존권 보장과 민생 살리기를 위한 경제민주화 운동에 전력을 다해나갈 계획임.

교육비·주거비·통신비·이자 부담 등 4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연대

극심한 양극화와 가계부담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계에서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가계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임. 이에 참여연대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토지구택공공성네트워크, 통신소비자운동단체, 서민금융보호단체 등과 적극 연대하여 반값등록금과 교육비 경감,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 반값등록금 못지않게 중요한 반값 통신비 실현, 가계부채 대책 추구와 이자폭리, 불법적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활동을 입체적으로 전개하였음. 특히 공적인 영역과 관련하여 현재도 각 가계의 고통과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주요 가계부담 비용의 획기적인 완화를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계속 수행해나가야 할 것임.

제주해군기지백지화를 위한 연대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125개 시민사회·종교계로 구성되어 2011년 5월 출범하였고 참여연대는 사무국을 맡아 활동하였음. 2012년도 관련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부지 내 발파 및 항만공사가 강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제주해군기지사업의 안보, 환경, 인권문제 등 종합적인 문제제기와 다양한 국내외 시민연대행동을 전개함. 특히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은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화와 역내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평화, 환경, 인권운동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2013년도 예산 통과를 막지 못했으나 다만, 70일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타당성 검증이라는 여야합의를 이끌어냄. 한편, 동북아 해양의 군사화가 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공군기지 등이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제주도를 복합군사기지가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확장된 운동전망이 요구됨.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연대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은 41개 시민사회·정당으로 구성되어 2011년 2월 출범하였고 참여연대는 사무국 운영을 맡아 활동하였음. 핵테러리즘 방지와 핵시설 안전 등 '핵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이명박 정부가 핵발전소 산업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와 핵억지력을 포기하지 않고 핵발전을 감축하고 폐기하지 않는 한 '핵안보'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함. 국제포럼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말하자>, 기획 강연, 국제공동행동의 날,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 항의행동, 핵안보정상회의 풍자 퍼포먼스 등을 진행함.

아시아 민주화와 권력감시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연대

2010년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제 네트워크인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sation Movement in Asia, SDMA)는 총 5개국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음. 2012년 5월 열리는 광주아시아포럼의 일환으로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와 감시' 워크숍을 열고 시민사회가 만들어 나가는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 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아시아 시민사회의 눈으로 바라본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좀 더 발전시키기로 함. 이에 다가오는 2013년 5월,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연대기구 가입 현황

- 2013. 2. 23. 현재 국내연대 61개 단체, 국제연대 6개 단체 가입
- 대구참여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등 2개 단체와 '참여연대 공동체' 협약을 맺고 있음

국내연대 - 상설 연대기구 (12개)

-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FID)
-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
-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시민평화포럼
-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 연대
-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최저임금연대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국내연대 - 한시적 연대기구 (49개, 기구명/가입년도/주무부서)

이마트의 헌법유린, 불법경영에 대한 대책위원회	2013	노동사회위원회
2013 새로운 교육 실현 국민연대	2012	민생희망본부
KTX 민영화저지와 철도 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2012	민생경제팀
MB방송장악심판, MB낙하산퇴출, 공정정보도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2012	공익법센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12	민생경제팀
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 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	2012	노동사회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12	사회복지위원회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2012	사회복지위원회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	2012	시민감시2팀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만들기 공동행동	2012	노동사회위원회
서민금융보호 전국네트워크	2012	민생경제팀

쌍용강정(구럼비)·용산 SKY Act_스카이 공동행동	2012	평화군축센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2012	사회복지위원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내보라 운동본부	2012	의정감시센터
친일·독재 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2012	정책홍보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2012	의정감시센터
PD수첩 공동대책위원회	2011	공익법센터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	2011	사회복지위원회
대형소매점포 영업시간의무휴일제 도입을 위한 전국연석회의	2011	민생희망본부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	2011	민생경제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2011	복지노동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2011	의정감시센터
역사정의시민행동	2011	정책홍보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2011	시민감시1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011	평화군축센터
조중동 방송 저지 네트워크	2011	공익법센터
친일·반민주 인사 국립묘지 안장반대 시민행동	2011	정책홍보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2011	공익법센터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	2010	민생희망본부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	2010	행정감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	2010	사회복지위원회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2010	시민경제위원회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	2010	민생희망본부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본부	2010	민생희망본부
식품안전과 광우병위험 감시 국민행동(가)	2010	민생경제팀
재개발행정개혁포럼	2010	민생희망본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2010	노동사회위원회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2010	민생희망본부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2010	평화군축센터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2009	정책홍보팀
국제인권네트워크	2009	국제연대위원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2009	평화군축센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09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2009	민생희망본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2007	민생희망본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2006	정책홍보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2005	평화군축센터
국가보안법 폐지연대	2004	공익법센터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2003	민생희망본부

※ 2012년에 발족한 국내연대기구 중 활동종료로 해소된 연대기구 (4개)

- 2012총선 유권자네트워크
- 6월항쟁 25주년 행사 추진 대표자회의
- 리우+20 한국 민간위원회
- 현병철 연임 반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세우기 전국긴급행동

국제연대 (6개)

ANFREL The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세계시민단체연합

Forum-A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포럼아시아

GPPAC Northeast Asia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the Armed Conflict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글로벌파트너십

ROA Reality of Aid
국제원조네트워크

SDMA Solidarity for Democratic Movement in Asia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소송 성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기획하고 진행한 소송 3개 한겨레21 최고/올해의 판결 선정



2012 최고의 판결

헌법재판소, 인터넷실명제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

2012 올해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통신자료를 넘기는 포털사 관행에 제동
서울중앙지법, 기관을 정하지 않은 전자우편 무제한 압수수색은 위법

한겨레21 2012.12.24 제941호 '잘가라 MB, 안녕 5년간의 삽질 법들이어' 참고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한겨레21 선정 2012 최고의 판결)

2010-01-25 참여연대,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2-08-23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인터넷실명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함

개인 신상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포털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판결 (한겨레21 선정 2012 올해의 판결)

2010-03-05 유인촌 전 장관 회피연아 동영상 올린 네티즌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2010-07-15 참여연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 제공한 NAVER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2-10-18 서울고법, NAVER에 50만원 손해배상 선고

검찰의 기간제한 없는 이메일압수 위법 판결 (한겨레21 선정 2012 올해의 판결)

2008년 검찰,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7년치 이메일 압수수색

2009년 경찰, 용산범대위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 이메일 압수수색

2010-10-12 참여연대,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12-09-11 서울지법, 국가에 손해배상 선고

휴대전화요금 원가공개 판결 (법률신문 선정 2012 올해의 판결)

2011-07-11 참여연대, 방통위 상대로 휴대전화 요금원가 정보공개 공익소송 제기

2012-09-06 서울행정법원, 요금원가 산정자료 관련 방통위 회의록 공개 판결

2013년 사업계획

활동 목표와 방향

10대 중점과제

특별과제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

사무처

연대활동

2013년 일정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활동 목표와 방향

중기(2013-2014년) 활동 목표

- 권력감시 역할 확대를 통한 새 정부에 대한 민주적 견제력 형성
- 진보 정책대안의 대중성과 현장기반 강화
- 진보적 사회운동의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강화
- 시민참여 기반 확충과 주체 형성
- 참여연대 구조개혁과 장기비전 확보

활동 방향

권력감시/정책의제의 대중성 강화

- 민생복지, 정치개혁, 공안기구 개혁 등 대중 호소력 있는 의제 개발
- 공권력 남용과 대자본 횡포에 대한 시민 다수의 견제수단 확보, 자구 행동 조직화

활동의 현장성 강화

- 당사자·현장의 행위자들과의 연대 협력 강화
- 정부기구, 국회 등 공익로비 대상과의 의사소통 확대
- 배제되고 차별당하는 이들과의 따뜻한 연대 강화

진보비전과 주체 형성을 위한 소통과 협력

- 노동·생태·풀뿌리 민주주의 운동과의 연대 강화
- 경제민주화, 복지, 평화, 참여민주, 탈핵탈토건, 대안적 소비 등 대안비전의 소통강화

시민참여구조와 주체의 확대

- 회원 소통구조 안정화에 기반하여 회원/시민이 참여구조 형성에 주력
- 여성, 청년 참여프로그램의 확대와 주체 형성,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참여연대 비전과 활동구조의 성찰과 쇄신

- 참여연대 20주년 평가와 비전 확보, 활동구조 개혁, 콘텐츠 혁신
- 참여연대 공동체 강화와 인적 물적 지속가능성 확보

중점과제 1. 중소기업·서민·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

• 사업배경

-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 개혁이 최근 우리 사회의 핵심 담론으로 부각됐지만, 중소기업·서민·청년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실제로는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경제적 자원 배분의 왜곡과 편향으로 형성된 거대 경제권력이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 또는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추진을 저지하려는 논리와 주장을 유포하는 등 저항이 이어질 것임
-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활동이 중요한 상황이고 특히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특혜를 감시·견제하고 개혁하는 것이 절실함

• 중기(2013-2014년) 목표와 주요 활동 방향

- 재벌·대기업 규제 강화, 담합 및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차단, 하도급 및 원하청 피해 근절, 청년일자리 대책 등 중소기업·서민·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정책 촉구와 공론화
-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안 제시 및 입법로비
-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노동현안시국회의 등과의 공동활동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당사자들과의 협력과 연대 강화

• 실행부서

- 민생희망본부, 시민경제위원회

• 2013년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중소기업·서민·청년과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 운동

- 경제민주화 운동의 당사자로서 중소기업·가맹점·자영업자 조직화와 활동지원 및 이들과 함께 하는 대중적인 경제민주화 운동의 전개

-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대응 및 신종·변종 골목상권 파괴 행위, 가맹점주·자영업자 생존권 문제 대응과 실태보고서 등 발간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개정,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등 새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들 입법·제도화
- 담합·부당내부거래·불공정행위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의 피해자 상담 및 법률 대응 지원 체계를 관련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며 추진
-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노동현안시국회의 등과 함께 효과적인 공동 연대활동 전개

2. 재벌·대기업 체제 및 불공정·특혜 감시와 개혁

- 재벌·대기업들의 불공정·특혜 행위 감시비판 및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의 입법·제도화 운동에 주력. 재벌·대기업들의 반복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공정위 신고 등으로 적극 대응
-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담합 금지, 부당내부거래 엄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재벌총수 범죄 불관용 조치, 대주주 전횡 방지 등 재벌·대기업 체제 개혁과제 제기와 실행추구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 보고서, 연속 토론회 등 기획
- 외국자본 위협론, 경제위기론 등의 형태로 제기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거스르는 담론에 대한 비판과 대응(언론기고, 논평, 토론회, 보고서 등)

3.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경제민주화 촉진

- 하도급 기업, 가맹점, 납품업체, 기타 중소기업인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및 횡포와 관련된 행위를 신고접수·상담·행정개선권고할 수 있는 '불공정신고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 제안 등
- 서울시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인 보호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활동
-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과의 공동 활동 전개

중점과제 2. 지속적인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 사업배경

- 가계에서 가장 많은 지출과 부담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주거비·통신비·가계부채 및 이자비용 부담 완화는 민생을 살리는데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
- 교육비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은 이미 공론화되었고 관련 대책들이 실행 중에 있으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서민 주거권과 주거비 부담, 통신비 부담 이슈를 비롯해 새로운 이슈로도 대응범위를 확대해 가계 부담 완화 및 민생안정을 더욱 촉진할 필요있음
- 참여연대의 가계부담 완화 캠페인은 민생살리기의 핵심이므로 꾸준히 대응해야 하고, '사회공공성' 강화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중기(2013-2014)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전세대란 해결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화와 당사자(세입자 등) 운동 강화
- 이동통신요금 인하, 통신공공성 복원 위한 소비자운동 강화와 통신대기업 횡포 근절
- 대학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및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 교육공공성 강화
- 이자폭리 근절 및 서민금융보호,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캠페인 지속
-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다방면 활동 기획·추진

• 실행부서

- 민생희망본부

• 2013년 주요과제 및 실행방안

1. 서민 주거권 보장과 주거비 낮추기

- 전세대란, 렌트푸어, 하우스푸어 문제 지속적인 대응과 보고서 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보증자리주택특별법·임대주택법 개정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토지주택 공공성 제고를 위한 입법운동
- 전국세입자모임을 결성하여 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고, 중소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

급 확대와 세입자 권리 강화 추진

- 토지구택공공성네트워크 등과 함께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2.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확보

- 새 정부 초기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인 인하를 위한 행동 전개
- KT 등 거대통신회사들의 불법행위와 소비자들에 대한 횡포 감시 및 대응
-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통신 소비자 권리 관련 대응 확대

3. 국가장학금제도 개선과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캠페인

-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완화 내지 폐지, 장학금액 인상 등 국가장학금 개선 활동
- 시행중인 '등록금 인상을 상한제'를 넘어 '등록금액 상한제'와 고등교육교부금제도 신설을 통한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활동
-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추가확대 및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정책 개선
- 국·공립대 대학생 네트워크 결성을 통한 기성회비 폐지 및 제도 개선
- 비리재단 퇴출, 사학비리 추방 등 교육비리 이슈 대응과 대학 투명성·공공성 제고

4. 가계부채·이자부담 완화와 서민금융 보호

- 새 정부의 가계부채, 서민금융보호 대책 중 긍정적인 공약들의 이행 촉구
- 가계부채 대책으로 제시된 파산법·과잉대출규제법·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제·개정 추진
- 채무자 인권보장 및 객관적인 채무조정제도 시행 추진
- 이자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가계부채 경감 활동 병행
-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 등과의 연대활동 강화

중점과제 3. 모두를 위한 복지제도 현실화

• 사업배경

-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복지국가 의제는 여야를 떠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과제들은 미완의 상태임
- 노령화와 사회안전망 부재 등으로 증폭되는 삶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하고 국가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 중기(2013-2014)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기초연금제도 도입,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복지국가 정책과제 제시 및 제도화
- 보육, 방과후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공급확대

• 실행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 2013년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기초연금 도입과 국민연금의 보장성 및 공공성 확대

- 보편적 기초연금제 도입 촉구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공론화
- 국민연금기금 투자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운동과 사회책임투자 촉구

2. 보건의료 분야의 보장성 및 공공성 확대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대선공약 이행 촉구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및 의료분야 공공인프라(공공병원, 보건소 등) 확대 운동
- 저소득층 지원 의료급여 예산확충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및 수급자 확대

3. 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증대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포괄하고 확대
- 노인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보장성 확대

4.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발전 방안 제시
- 차상위 계층으로 급여 확대 및 현실화 운동

중점과제 4. 노동권 보호와 비정규직 문제해결

• 사업배경

- 노조 활동에 대한 사측과 정부의 민·형사상 소송 및 고소고발, 노조파괴행위 등으로 노동 3권이 무력화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상황
-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고 있음. 민간위탁, 외주화,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 방식에 의한 비정규직 문제는 특히 심각함

• 중기(2013-2014년)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노동탄압 근절, 노동권·노조활동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공론화와 집중 사업 전개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운동

• 실행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 2013년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노동권 침해 대응과 부당노동행위 제재 강화

- 노동자 인권침해 및 노조활동 탄압에 대응하는 언론기획, 토론회, 근절방안 제도화
- 노동조합과 조합원 활동에 민·형사 책임부과 및 처벌을 제한·금지하도록 제도개선
-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및 제도개선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3.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과 사회적 연대 강화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간접고용 규제,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 법제도 개선운동
- 비정규직 차별 사업장,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촉구
- 노동대중 조직과의 연계 확대와 현장성 강화

중점과제 5. 유권자 참정권 확대와 국회·정치 바로 세우기

• 사업배경

-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2012년 대선을 계기로 재확인되었고, 정치권도 이를 외면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나마 수용하였음.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개혁이나 행태변화로 이어진 것은 아님.
-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이 소멸·방치되는 것을 막고,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갈 때임.

• 중기(2013-2014)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제대로 일하는 국회',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라는 국회정치개혁 방향 제시
- 국회와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및 정치권 행태 감시 및 제도개선방안 입법로비

• 실행부서

- 의정감시센터

• 2013년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국회와 정치개혁 방향 제시 및 공감대 확산

- '제대로 일하는 국회,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방안 제시
-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 확보를 위해 시민의견 모으기, 언론기획, 국회개혁 동참 정치인과의 시민공청회, 시민행동 기획 등 여론조성 활동

2. 투표시간 연장 등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

- 투표시간 연장 등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운동 진행
-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법률 조항을 쉽게 정리한 홍보물 제작

3. '국회와 정치 바로 세우기' 법제도 개선

-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 활성화, 국회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 비례대표 확대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 국회 및 정치개혁 방안 제시
- 정치개혁안 입법청원 및 입법로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정

치관계법 모니터링과 평가

4. 국회 운영 감시와 시민기대 부응하는 역할수행 촉구

- 공개, 기록표결 원칙을 훼손한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국회운영실태 감시
-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회운영과 법안심의, 인사검증 기능 수행 감시

중점과제 6. 검찰권 오·남용 감시와 검찰 민주화

• 사업배경

- 지난 몇 년 동안 검찰개혁 여론이 비등하였고, 18대 대선 기간중에 여야 각 후보들이 일부분이나마 수용함에 따라 검찰개혁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
- 이명박 정부에서 극심했던 검찰의 권한 오·남용 행태가 단절되도록 새 정부 초기부터 사회적 감시와 견제를 활성화할 필요있음

• 중기(2013-2014)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검찰개혁 과제 중 공감대가 형성된 것들의 제도화 및 새로운 과제 연구와 공론화
- 권한 오·남용 검사 감시와 검찰권 행사 견제

• 실행부서

- 사법감시센터

• 2013년 주요과제 및 실행방안

1.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공감대 형성된 개혁과제 실현

-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 외 독립적인 수사기관 설치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의 실현을 촉구하는 활동 전개

2.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민주화 과제 공론화

- '검찰 민주화와 견제' 방향의 검찰개혁 과제 발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 검찰인사 결정과정 민주화방안 연구 및 정책과제 제시

3. 권한 오·남용 검사 감시와 검찰권 행사 모니터링

- 권한 오·남용 검사 등 주요 사건 담당 검사(지휘부) 감시와 인사상 불이익 요구
- '그 사건 그 검사 자료실(가칭)' 운영
-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권 행사 감시

중점과제 7. 부당한 행정과 공권력에 대한 시민견제 수단 확대

• 사업배경

- 지난 몇년간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과 대형 공공사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도 심각함
- 민주화 이후 개선되어온 권위적이고 부당한 행정 집행과 공권력 행사의 부활을 제어하기 위한 민주적 견제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구적 행동을 강화해야할 상황임

• 중기(2013-2014)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권위적이며 부당한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과 공권력 행사를 민주적으로 견제할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고, 미흡한 법제도를 제정 또는 개정함
-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민주적 견제 수단이나 시민자구수단을 발굴하여 이를 실제로 활용한 공익소송 등 시민행동을 전개함

• 실행부서

- 행정감시센터, 공익법센터

• 2013년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

1. 민주적 견제 수단 조사 및 선정

- △대형 국책사업 사전검토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정부주도 조약 및 통상협상을 통제하기 위한 통상절차법 등 개정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 시민참여제도 개선 △국책사업 강행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 예방 및 해결위한 방안 △행정소송 원고 인정범위 확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집회참가자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제한 등 시민의 견제 방안 조사 및 우선 과제 선정

2. 견제 수단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 형성

- 사례집 발간, 공청회, 증언대회 등 공론화를 위한 계기마련
- 언론기획(연속기사 또는 시사프로그램)을 통한 여론형성

3. 공익입법로비와 공익소송 제기

- 개선안의 입법청원과 공익로비
- 부당한 행정과 공권력 행사 중지, 독소규정 폐지 위한 공익소송(위헌/행정소송) 제기

중점과제 8. 정전 60주년, 갈등과 전쟁을 끝내자 캠페인

• 사업배경

- 2013년도는 정전 60년이 되는 해임. 지난 60년간 휴전상태를 지속한 가운데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반복되었고 전면전으로 발전될 수 있는 위기마저 겪는 등 평화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
- 연초부터 북한의 로켓 발사,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평화는 갈림길에 서 있음.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항구적, 근본적 평화를 위해서는 포괄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접근과 해법이 요구됨
- 남북간 긴장과 군사주의 강화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 등 지역 갈등을 고조시키고 신냉전 도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음. 정전 60주년 캠페인을 통해 한반도나 동북아 차원에서 평화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각국 정부가 새로운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만들어가고자 함

• 중기(2013-2014)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북핵·미사일 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및 주변국간 대화 촉구
- ‘한반도 정전 60년 : 전쟁을 끝내자’(가칭) 국내외 캠페인 추진
- 한반도·동북아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포괄적 해법(남북대화과 교류협력 재개, NLL 충돌방지와 공동이용방안, 한반도 동북아 핵위협 해소방안,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등) 제시

• 실행부서

- 평화군축센터

• 2013년 주요과제 및 실행방안

1.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시민대안 공론화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 한반도 군사갈등 해소와 관계개선을 위한 남북간 직접 대화 촉구
-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남북교류 재개 및 활성화 촉구

NLL 무장충돌 방지와 생태평화공원화

-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국지전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시스템(핫라인 등) 복원 촉구
- NLL을 서해 생태평화특별지대로 선포할 것을 촉구

동북아 비핵지대화 및 핵군축

- 동북아시아 핵위협 근원적 해소를 위한 '동북아 비핵지대화' 방안 국내외 의제화

정전협정 폐기 및 평화협정 체결

- 한국전쟁 휴전상태의 종식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등으로 대체할 것 촉구
- 북핵 해결과 병행 또는 우선하여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 촉구

2. '한반도 정전 60주년, 전쟁을 끝내자' 캠페인 추진

- 국내외 단체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연대 캠페인 및 의회 내 협력 그룹 형성
-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외 NLL 갈등의 평화적 해결, 남북 직접 대화와 교류 협력, 동북아비핵지대화와 군축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인 방안 제시
- 정전 60주년 특별 강연 기획,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 안내서 : 뽀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배포, 정례적인 평화칼럼 발행
- 60여개 도시에서 평화행동 진행하고 각국 남북미중 대사관에 종전 촉구 호소문 발송하는 <정전 60주년 한국전쟁 종식 촉구 국제행동의 달> 진행
- 주요 계기별로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시국선언, 각계 연서명 추진
-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제4회 평화군축박람회, 제4회 아태지역 평화군축을 위한 국제워크숍 등 연례기획사업 진행

3. 동북아 비핵지대화 및 핵군축을 위한 국내·국제 연대 활성화

- 핵군축 관련 국제사회 네트워크 통한 국제사회 공론화 및 지지기반 확장(무장갈등에 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 핵군축을 위한 의원네트워크(PNND), 핵무기철폐를 위한 국제캠페인(ICAN) 등)
- 한반도·동북아 핵위협 해소를 위한 한미일 시민사회/의회 공조방안 모색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반대 활동, 연례 유엔 핵군축보고서 발행
- 후쿠시마 핵재난 2주년 사업

중점과제 9. 회원 15,000명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 사업배경

-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회원 및 일반 시민의 부정기후원으로 대부분의 재정을 충당하는 등 건전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으나, 매년 조금씩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참여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원 회비의 규모를 더 늘려야 하기에 2014년말까지 회원 15,000명을 만드는 발전과제를 2012년부터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음
- 2012년 이후 회원모집 캠페인 계획이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2년간 증가폭이 설정된 목표 달성에는 미진한 만큼, 남은 2년간 더 집중해야 함

• 중기(2013-2014)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가입 가능성이 높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회원가입을 권유하여 신입회원 확대 함
- 회원 맞춤형 의사소통 및 참여프로그램 정례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여 탈퇴율을 더 낮춤

• 실행부서

- 시민참여팀

• 2013년 주요과제 및 실행방안

1. 월단위 회원모집 캠페인과 적극적 홍보

- 월단위 회원가입 홍보 메시지 선정, 소셜네트워크망/대안매체 통한 홍보강화
-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 회원가입 현황 정보제공, 참여연대 건물 내외부 회원모집 홍보물 게시 확대 등을 통해 회원모집 메시지 전달기회 확충
- 15,000명 목표 달성을 위한 이벤트 진행
- 타 부서(팀)의 활동 또는 캠페인과 연동하여 회원모집 활동 진행

2. <내 친구가 회원이 되었어요> 캠페인 등 인적 네트워크 활용

- <내 친구가 회원이 되었어요> 캠페인 홍보확대 및 회원가입권유 이벤트
- 피권유자에게 참여연대 홍보물 대리발송, 회원가입 권유 매뉴얼 배포 등
- 회원 접촉면 넓히기 : 카페통인 활용, 정기적인 문자 서비스 등

3. 가입가능성 높은 시민층을 향한 캠페인

- 가입가능성 높은 그룹 발굴 및 그룹별 홍보 진행(사회복지사, 교사, 진보/대안매체 이용자, 사회참여형 대중행사 참여자, 참여연대 시민교육 수강생, 참여연대 문화프로 그램 참여자, 카페통인 이용자 등)
- 홍보물 제공 및 이메일 보내기, 참여연대 홍보부스 설치, 광고게재 등
- 재가입 가능성 높은 탈퇴회원층 회원(재)가입 캠페인

4. 보류 및 탈퇴율 낮추기

- 미납/보류회원 납부 재개율 높이기 위해 월단위 목표관리 및 안내강화

중점과제 10. 참여연대, 시민의 놀이터 만들기

• 사업배경

- 여러 촛불집회와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사회참여 의지가 표출된 바 있고, 이런 참여의지는 이어질 것임. 이러한 시민들의 의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시민참여'를 지향하는 참여연대의 책무이기도 하고 참여연대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청년연수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현재 11기까지 청년인턴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참여연대를 통해 변화, 발전하는 청년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인턴프로그램의 수준도 발전시킬 단계에 이르렀음

• 중기(2013-2014) 목표와 주요활동 방향

-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와 함께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되도록 지원함
- 자원활동 이외에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을 기획하고 지원함
- 청년/대학생 대상 사업을 개선하고 이들의 참여를 촉진함
- 서로 배우며 삶과 앞을 일치시키기 위한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함

• 실행부서

- 시민참여팀

• 2013년 주요과제 및 실행방안

1. 시민행동기획단 - (가칭)공감과 행동 운영

- 참여연대 회원·자원활동가와 함께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시민모임(시민행동기획단)을 구성
- 연 2~3가지 내외의 시민캠페인을 선정해 회원 및 시민들과 함께 실천
- 시민행동기획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매칭펀드 방식의 활동예산, 기타 실무인원과 홍보 수단 등을 지원

2. 청년층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확대

- 진행 중인 연 2회 청년인턴프로그램 개선
- 인턴교육 외 대학생 대상 강좌 프로그램 다변화와 참여프로그램 개발
- 청년·대학생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기금마련
- 참여연대 대학생 모임 창설 모색

3. '민주주의 학교' 확장 및 대표적 프로그램 개발

-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강화하기
- 시민활동가와 청년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회운동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기획
- 참여연대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민주주의 학교' 강좌 확대 및 체계화

특별과제.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사업

• 사업배경

- 2014년은 참여연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 1994년 9월 20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한 참여연대는 현재 회원 13,000여명 규모의 대표적 시민운동단체로 성장하였음.
-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창립 정신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개혁의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에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주었기 때문임
- 20주년을 계기로, 참여연대 운동의 성공과 조직 성장의 기반이 되는 원칙과 전략, 운동 의제, 내부 역량, 시대적 조건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새로운 발전 전망과 실천 과제를 마련해야 함

• 사업 목표

- 참여연대 20년 운동 역사 정리 및 평가
- 향후 10년 발전 전망과 혁신 방안 마련
- 지난 20년간 참여연대와 함께한 사람들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 공간 개방과 이미지 개선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 단계별/연도별 과제

- 1단계(~2013년 2분기) : 위원회 구성 및 기초 논의 진행
- 2단계(~2013년 4분기) : 영역별 심화 논의 진행 및 기획 논의 완료
- 3단계(~2014년 1분기) : 20주년 사업 중간점검 및 2014년 연간 일정 확정
- 4단계(~2014년 2분기) : 기념 책자 발간 및 부문행사 개최
- 5단계(~2014년 3분기) : 20주년 기념 행사 개최, 희망과 비전 보고서(2014) 발표

• 20주년 사업 주요과제 및 실행방안

20주년위원회(기칭) 및 산하 위원회 구성

- 역할 : 20주년 사업의 기획·집행 총괄

-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구성 : 전·현직 공동대표, 집행위원, 전직 활동기구 장 등
- 조직구성 : 산하에 편찬위원회·평가비전위원회를 두고 사무처 중심으로 기념행사기획단, 통인동 사옥 리모델링을 위한 공간개선기획단 운영



주요과제 및 실행방안

1. 20년 평가와 비전 수립 : 평가비전위원회

- 20년 평가 : 참여연대의 원칙과 운동전략 등 20년 활동을 평가하고 혁신 과제 정리
- 향후 10년의 비전 : 장기 발전 전략과 그에 따른 조직재편 방안 논의
- 평가비전위원회 산하에, 시민참여사업 개발 소위, 참여연대 유지재단 추진 소위, 조직구조 개편 및 상근시스템 개선 소위, 기타 위원회가 의결한 소위 등을 설치
- △회원, 임원·상근자, 각종 전문가 그룹,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진행, △회원, 자원활동가, 임원, 상근자, 관계 전문가 심층 인터뷰, △ 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회원 공청회 등 내외부 의견 수렴
- 평가비전위원회 논의를 정리하여 20주년판 '희망과 비전 보고서 2014' 발표

2. 편집 출판 : 편찬위원회

- 20년 백서 및 20년 사사(社史)집 : 참여연대 20년 역사와 활동 현황을 효과적으로 개괄하는 백서 및 인터넷 백서 웹페이지 제작과 20년 사사(社史)집 발간
- 20주년 기념 콘텐츠 개발 : 역대 활동성과를 홍보하는 20주년 기념 콘텐츠 개발, 20주년 기획 영상 제작
- 기념 단행본 발간 : 월간 참여사회가 기획연재하고 있는 <참여연대 20년 20장면> 출판, 1997년 출간된 단행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업그레이드판 도서 출판

3. 기념 행사 및 홍보 : 행사기획단

- 참여연대 이미지 통합(CI) 및 개선 : 참여연대 이미지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참여연대 로고, 엠블럼 등 CI 개선
- 20주년 기념 학술행사, 후원의 밤 개최
- 전직 임원·회원·상근자 초청 '홈커밍데이' 행사 및 20주년 기념 시민한마당 개최

4. 통인동 사옥 공간개선 : 공간개선기획단

- 공간 개방과 혁신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사옥 만들기
- 시민 참여와 문화 공간 확대, 홍보 전시 공간 정비 및 아카이브 공간 마련
-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리모델링 검토
- 통인동 사옥 공간 개선을 위한 모금행사 기획

의정감시센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유권자 참정권 확대 제도개선 지속
- 시민이 바라는 국회개혁, 정치개혁 캠페인 추진
- 의정감시 모니터 사업의 전문성, 안정성 강화
- 국회의원 DB사이트의 콘텐츠 다양화·대중화

• 2013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유권자 참정권 확대, 국회·정치 바로세우기> 실행

2. 19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사업

- 참여연대가 주목하는 의안을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본회의와 상임위 표결 보고서 발간
- 보고서에는 법안의 주요 골자, 의원 발언, 표결 결과 등 팩트시트(fact sheet)를 수록해 실태를 알기 쉽게 보여주고, 인포그래픽(Infographic)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용 콘텐츠를 동시에 기획하여 널리 유통함

3. <열려라 국회> 국회의원 DB사이트 개편

- 누적된 DB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DB 관리툴 개편
- 주요 메뉴 재편성, DB를 이용해 의정활동의 유의미한 정보를 그래프로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과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연대 주목 법안, △주요 표결에 대한 참여연대 평가, △기억해야 할 주요 정치 일지,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Q&A 등 신규 콘텐츠 반영
- <열려라 국회> 사이트 DB 중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 정보, 참여연대 주목 법안 등 핵심 내용을 간추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4. 새 정부의 정치개혁 관련 정책평가와 이행 모니터링

사법감시센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검찰제도 개혁 과제 중 공감대 형성된 것 시행 촉구
- 검찰민주화 방향에 부합하는 개혁방안 공론화
- 검찰권 오·남용 문제 검사와 검찰권 행사 감시
- 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에 대한 감시와 비평 활성화
- 사법제도 개혁 시행 상황 점검과 발전방향과 시정사항 공론화

• 2013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검찰권 오·남용 감시와 검찰 민주화> 실행

2. 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비평 증진 및 자료축적

- 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에 대한 시민과 함께 하는 비평 활동 증진
- 사회적 관심 또는 특정분야에 집중한 판결(결정) 자료 축적 및 DB구축 기획

3. 로스쿨 및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성과/한계 진단과 발전의 계기마련

- 사법개혁운동의 결과로 도입된 지 5~6년째인 로스쿨과 국민참여재판 제도 운영의 실태(성과와 한계) 점검과 평가, 개선사항 제시 등

4. 모니터링 보고서 안정적 발간

- <퇴직 법관 사건수임사례>,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 <배임 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 조사 보고서>, <검찰보고서> 등 사법감시센터가 발간해 온 모니터링 보고서의 주기적이고 안정적인 발간을 위한 계획 수립

5. 새 정부의 사법개혁 관련 정책평가와 이행 모니터링

행정감시센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부당한 행정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 견제 수단 확대
- 부패방지 및 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행정감시센터 모니터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
- 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의 권한남용 감시와 개혁

• 2013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부당한 행정과 공권력 행사 시민 견제 수단 확대> 실행

2.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강화 제도 개선

- 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국민소송법 등 개선안 입법 활동
- 새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및 인사검증시스템 모니터링과 검증시스템 개선
- 공직자 이해충돌 모니터 보고서 및 관련 법제도 개선

3. 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정보공개 실태 모니터 보고서 발표 및 정보공개법 개선 입법로비
-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선안 입법로비 및 기록물관리 제도 개선

4. 부패사건 모니터 및 이명박 정부 문제사건 해결

- 정권 교체기 부패 사건 현안 대응
-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중 진실규명 또는 법적 책임 추궁을 못한 사건 해결

5. 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감시와 개혁

-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의 권한 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맞춘 경찰개혁 촉구
- 수사권 분리·이관, 국내정보수집 폐지, 국회의 통제 강화에 맞춘 국정원 개혁 촉구

6. 새 정부의 반부패 및 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평가와 이행 모니터링

공익제보지원센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공익제보자 치유 프로그램 등 공익제보자 지원 확충

• 2013년 주요과제

1. 공익제보자 지원 체계 강화와 지원내용 축적

- 상시적 지원 시스템 구축, 제보사례 축적, 연례 보고서화 추진
- 공익제보자모임·호루라기재단 등과 타 공익제보지원단체와 연대 지속

2. 공익제보자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

-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조례 제정
- 의학/약학/심리전문가와 연계한 공익제보자 치유프로그램 추진

3. 공익제보 법제도 개정 추진

- 공익제보인정 범위와 공익신고처 확대, 익명신고를 위한 변호사 대리, 보상액 상향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 각 정부기관의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침 등 모니터링 및 개선촉구

4. 제3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

- 제3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
-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연대 공익제보 지원활동 시민 인지도 제고

5. 공익제보관련 교육 출판 프로그램 추진

- 공익제보 접수(신고)기관인 국회의원실이 참여하는 '공익제보 접수와 사례 분석' 교육프로그램 추진
- '공익제보자 열전', '서바이벌 가이드북' 등 공익제보 관련 도서 출판

공익법센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표현의 자유 침해 차단 기획소송과 법제도 개선
-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공익법제 입법화
- 공익변호사 양성

• 2013년 주요과제

1.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침해제도 개선

-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확장하기 위한 공익소송 및 법개정(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통신자료제공 영장주의 도입, 방송통신심의위에 의한 검열성 심의제도 개혁) 추진 등

2.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공익법제 도입

-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입법로비
-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언론기획
- 로스쿨생 대상 공익법제 운동 홍보 특강 등 교육 프로그램

3. 공익변호사 양성

- 제2기 공익변호사 연수 실시, 로스쿨생 실무수습 기회 제공
- 정의를 위한 소송학교(가칭) 등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4. 새 정부의 표현의 자유와 공익법제 관련 정책평가와 이행 모니터링

사회복지위원회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평가 및 대선공약 이행 감시
- 국회, 보건복지부 등의 복지정책 입법·행정기관 모니터링 강화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마련
- 보편적 복지 확대 개혁입법 운동

• 2013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모두를 위한 복지제도 현실화> 실행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마련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실태보고서 발표
-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언론기획 및 토론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현황 및 개선방안 제시
- 사회서비스 현장리포트 발간

3. 새 정부의 보건복지관련 정책예산 평가와 이행 모니터링

- 법안 및 상임위 회의, 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 등 감시와 평가
-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발행

4. 월간 '복지동향' 안정적 발행 및 출판사업 강화

노동사회위원회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노동시장 개혁과제 수립 및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 고용노동부 등 노동행정기관 모니터링 강화
- 생활임금 제도화 및 확산
- 새 정부의 대선공약 및 정책 이행여부 감시

• 2013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노동권 강화와 비정규직 문제해결> 실행

2. 고용노동부 등 노동행정기관 감시 및 견제

-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행정기관 활동 감시, 감사청구
- 노동행정기관 모니터링 정기화, 정보축적

3. 노동현안 대응과 노동부문 개혁과제 보완추진

-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불법파견, 이마트 노조탄압 등 노동현안 대응
- 산재, 정년연장, 노조전임자 임금 등 노동부에서 소홀했던 쟁점 관련 개혁방안 제시와 입법로비

4. 생활임금 제도화 및 확산

- 생활임금추진위원회 연구용역 등 2012년 사업 확대, 보건노조 등 노조와의 연대사업과 참여자치지역연대운동와의 공동캠페인 진행

5. 새 정부의 노동관련 정책평가와 이행 모니터링

-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관련 정책 평가 및 참여연대 대안제시
- 새 정부 정책 이행에 필요한 입법과제 제시, 법안 처리과정 감시 및 현안대응

민생희망본부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중점과제 '경제민주화 실현'과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활동
- 교육, 주거, 통신, 가계부채(이자) 문제 외 새로운 소비자·서민 이슈 발굴 및 대응
- 새 정부의 공약이행 감시 및 주요 민생정책 현실화 촉구

• 2013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중소상공인·서민·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 실행

2. 중점과제 <지속적인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살리기> 실행

3.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및 소비자 이슈 확대 기획

-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폭등 위기, KTX 민영화 반대 등 지속적 대응
- 주요 공공 서비스 민영화 추진 감시 및 대응
- 주요 가계부담 문제 외에 공공서비스·물가·금융 문제 등 중요 서민·소비자 생활 이슈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새로운 의제 발굴 병행

4. 서민·소비자 권익 관련 공익소송 수행 및 홍보 강화

- 이동통신요금원가 소송 등과 같은 서민·소비자 권익 관련 공익소송 활성화
- 서민·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공공기관, 공기업, 공적서비스 관련 회사 등의 불법·비리·부조리에 대한 법률적 대응 확대
- <세상을 바꾼 민생운동, 공익소송 이야기> 등 도서자료 발행 및 시민소통 확대
- 주요 민생 이슈에 대한 시민 설명회, 강연회, 시민모임 결성 등을 적극 진행

5. 새 정부의 민생관련 정책평가와 이행 모니터링

- 새 정부의 민생살리기 10대 공약과 35개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서 의미있는 공약의 이행 촉구 및 문제있는 공약과 정책의 개선 및 보완 촉구
-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6개월 등 시점에 맞춘 박근혜 정부 평가 토론회 개최
- 임시국회와 정기회에서 민생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 보고서'의 연속 발행과 국회 입법로비 활동

시민경제위원회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중점과제 <중소상공인·서민·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의 재벌관련 부문 활동 전개
- 금융기관 횡포 근절 등 서민금융 이슈 대응과 금산분리, 금융기관 공공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제와 금융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확대

• 2013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중소상공인·서민·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 실행

2. 금융정책 감시 및 금융소비자보호 운동 전개

- 금융기관 횡포 감시와 근절, 금융 소비자 보호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고 금융정책과 주요 금융기관 감시 병행
- 저축은행 사태 모니터링 지속과 저축은행의 서민금융기관화를 위한 대안 제시
- 2012년 입법청원한 '서민금융보호 6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공익로비 활동

3.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지속

- 론스타 상대 주주대표소송의 진행 및 론스타 사태 모니터링 지속
- 론스타의 불법 및 부당이득 행위, ISD(투자자국가소송) 제기, 금산분리 문제 등에 대한 대응, 심층 토론회 개최 등

4.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관련 정책평가와 이행 모니터링

- 박근혜 정부의 35개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관련 공약 중에서 의미있는 공약의 이행 촉구 및 문제있는 공약과 정책의 개선 및 보완 촉구

조세재정개혁센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복지국가 재원 마련을 위한 담론 생산, 세제개편 방향 제시
- 예산분야에 대한 시민운동 역량 제고 및 납세자 권리 강화
- 시민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국세청 개혁
- 새 정부 세입세출·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정책 제안

• 2013년 주요과제

1. 공평과세와 부자증세 실현 캠페인

- 공평과세 위한 세법 개정 관련 입장 발표와 연속 토론회 개최
- 불합리한 조세감면제도, 세법개정에 따른 소득·계층별 세 부담 차이, 해외의 조세 정의 동향 등을 보여주는 기획 보고서 발표
- 부자증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시민운동 토대 만드는 특별 행사 등

2. 예산안 편성 모니터링 및 예산낭비 감시

-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 모니터링 및 민생, 복지 예산의 적극적 확보
-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 모니터링 및 민생, 복지 예산의 적극적 확보
- 납세자소송법 입법청원 및 의원 발의 추진, 입법로비 활동
- 예산 낭비 사례 발굴 및 공론화 사업 추진

3. 조세정의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4. 국세청 감시 및 개혁

- 시민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세청의 비밀 행정 개선과 주요 세정 활동 감시
- 국회와 상호 협조하여 조세정보 공개 확대 요구 및 관련 제도 개정

5. 새 정부의 조세재정 관련 정책평가와 이행 모니터링

- 대선 공약 이행위한 재원마련 계획 모니터 및 재원마련 과정 평가, 정책대안 제시
- 복지국가 실현에 조응하는 조세체계 담론 형성을 위한 시민사회포럼 운영

평화군축센터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중점과제 <정전 60주년, 갈등과 전쟁을 끝내자 캠페인> 실행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 지속
- 정치편향 집체안보교육 모니터링 등 안보기구/정책 민주화 운동 기획
- 평화군축센터 10주년 맞이 평화운동의 향후 10년 전략과 과제 탐구

• 2013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정전 60주년, 갈등과 전쟁을 끝내자 캠페인> 실행

2.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 지속

- 70일 검증 기간 공사 중단 시민행동 전개
- 해군기지 저지 운동과 더불어 공군기지 건설 등 후속 군사화 계획 반대운동 결합
- 동아시아 해양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아시아-태평양 시민사회네트워크 강화

3. 군병력 감축 및 군복무기간 단축

- 군복무기간 단축(병역법 개정)과 군병력 감축을 포함하는 국방개혁 촉구 및 입법청원
- 국방예산 증가, 공격적 첨단무기도입 반대 등 국방예산 모니터링과 선도적 군축 촉구
- 대만 군병력 감축사례 분석보고서 발행, 확산탄 반대 운동

4. 안보기구/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기획사업

- 집체안보교육 실태 모니터링, 군인권법 입법과제 도출
- 안보조약절차법 입법 운동 및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협상 모니터링
- 천안함 침몰 3년 기획사업, '평화권' 공론화를 위한 기획사업
- 국가보안법 폐지와 남북인권대화 촉진을 위한 대안 마련

5. 평화군축센터 10주년 기념사업

- 평화군축센터 후원의 밤 및 10주년 심포지엄, 회원·실행(자문)위원 홈커밍데이
- 향후 10년 활동전략 마련을 위한 내·외부 인사 참여 워크숍
- 회원감사행사(평화기행) 및 부서 후원회원 10% 증가 회원확대 캠페인

6. 새 정부 국방·외교·통일관련 정책평가와 이행 모니터링

국제연대위원회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새 정부 개발협력 정책 모니터링
- 대외개발원조(ODA) 감시운동 강화 및 투명성 확보 제도화
- 인권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의 새로운 모델 시도
- 참여연대 캠페인 영문자료 배포, 국제사회의 흐름과 운동 사례 모니터링 정례화

• 2013년 주요과제

1. 대외개발원조(ODA) 감시

- 국회의 ODA 정책역량 및 관심 제고, 국정감사와 입법활동 등에서 협력할 국회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ODA 감시운동 네트워크 확대
- ODA 관련 다양한 정보공개청구와 정보비공개 사례 보고서 발행, 부패사건 모니터링, 투명성 증진을 위한 정보공개체제 및 부패방지 제도개선 촉구
- 국제원조 투명성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가입촉구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 촉구, 이행실태 보고서 발행

2. 아시아 연대

- 아시아 국가가 유엔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심의를 받을 시, 한국 외교부에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을 알리고 의견 표명할 것을 촉구하는 등 인권개선운동 연대
- 광주아시아포럼 등을 통한 아시아 민주화운동 연대활동 지속
- 아시아 및 국제사회 의제와 운동 사례 소개하는 칼럼 '아시아 생각' 정례적 발행
- 아시아강좌, 이야기마당 등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3. 유엔 애드보커시

- 국내 활동가 대(對)유엔 활동 역량 강화 위한 강좌
-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및 한국정부의 UPR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

4. 참여연대 캠페인 영문화와 국제사회의 주요 흐름과 운동 사례 모니터링

- 참여연대 주요 캠페인 소개 분기별 영문자료(PSPD Quarterly Report) 발행
- 국제 인권 이슈 및 해외 운동 사례 소개

5. 새 정부 대외개발원조 및 인권관련 정책과 외교활동 모니터링

아카데미느티나무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한국사회 시민교육 변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참여연대 시민교육 개발
- 아카데미 느티나무의 교육(목표, 내용, 방법, 관계)에 대한 연구
- 참여연대 시민교육 역량 강화

• 2013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참여연대, 시민의 놀이터 만들기> 중 '민주주의 학교' 부분 실행

2. 4개 시즌별 강좌 교육의 발전

-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 강좌 진행

3. 새로운 교육 시도

- 교육의 가치, 목표, 내용, 방법이 통일된 시민교육 개발(워크숍, 토론회와 대화, 세미나)
- 기획자, 강사, 참여자들이 함께 주체가 되어 만드는 시민교육 발전
- 새로운 교육 참여자(청소년, 교사 등)들을 위한 교육 개발

4. 아카데미 느티나무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평가와 연구

- 아카데미 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평가와 연구 진행
- 강사 등 전문가와 참여자 인터뷰

5. 참여연대 시민교육 역량 강화

- 참여자, 강사, 상근자가 서로 배우며 함께 참여하는 배움의 공간 만들기
- 실무진 교육 역량강화 (연 10회 실무진 내부 세미나, 연 2회 이상 상근자 교육, 참여연대 활동기구 주관 시민교육 지원)

참여사회연구소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연구 역량 강화 및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

• 2013년 주요과제

1. 연구·학술

- 집중 연구 주제로 '평화복지국가의 조건 : 경제모델과 주체',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사회운동', '민주주의와 독재' 세 가지를 선정하고 연구 실행 조직 구성 및 연구 착수
- 집중 연구 주제에 대한 심포지엄, 브런치 포럼(내부 세미나) 등 개최

2. 출판

- 단행본 《스웨덴 모델은 유효한가 -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해》(가제) 출간
- 단행본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적 애국주의 - 대한민국사 논쟁》(가제) 출간
- 단행본 《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가제)》 출간
- 단행본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사회운동》(가제) 기획
-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발간 지속

3. 시민정치시평

-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 <시민정치시평> 발행 지속

4. 조직정비

- 이사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등 각 위원회 위상 조정 및 역할 강화, 임원 확대

시민참여팀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회원 15,000명 만들기과 탈퇴율 낮추기
-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연대와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행사 진행 및 정례화
- 청소년 탐방프로그램 발전 및 청년층 대상 사업 모델마련
- 회원 소통 및 정보 관리 프로그램 개선 지속

• 2013년 주요과제

1. 중점과제 <회원 15000명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만들기> 실행

2. 중점과제 <참여연대, 시민의 놀이터 만들기> 실행

3. 회원 및 시민과의 접촉면 넓히기

- 회원모임협의회와의 만남 정례화, 회원참여캠페인 등 공동 사업 진행, 회원소모임 신규 결성 지원 등을 통한 회원모임 지원 및 활성화
- 카페통인 외부개방 및 전시장으로서의 역할 지속하면서 시민예술가, 지역 주민등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기획
- 연 2회 자원활동가 이벤트 개최, 활동력 높이기, 자원활동가 그룹 소모임화 등을 통한 자원활동가 소속감 고취

4. 다양한 계층과의 만남 확대 및 지속

- 청소년용 참여연대 방문·체험 프로그램 홍보 강화(중고등학교에 공문 등 발송)하고, 시민사회운동을 직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의 심화프로그램 개발
- 참여연대 상근자/임원의 학교 방문(출강) 프로그램 추진
- 참여연대로 찾아오는 방문객맞이 프로그램 개선

5. 지역회원과의 교류 확대

- 수도권 외 지역회원 만남의 날 5개 이상 지역에서 실시

- 수도권 지역 회원 만남의 기회 마련 (문화행사나 이슈참여 또는 등산 등을 이용한 번개모임)

6. 기타

- 시행 중인 신입회원 · 1년 회원 · 10년 회원 대상 감사프로그램 진행 지속
- 가입연차 1년 증가에 맞춘 감사인사프로그램 등 신규 감사프로그램 기획 및 실시
- 평생회원, 명예회원 등 회원관련 제도 정비
- 신입회원한마당, 봄소풍, 가을여행 등 연례 회원행사 진행 지속

정책홍보팀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콘텐츠 형식 혁신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
- 2기 회원모니터단 운영, 활동통계 정례화 등 평가관리 지원 안정화
- 창립 시기부터 축적해온 여러 유형의 자료정리 및 관리 체계화

• 2013년 주요과제

1. 특별과제 <참여연대 20주년 기념사업> 실행

2. 참여연대 콘텐츠 혁신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

- 기존의 이슈리포트, 보고서 외에 정책 자료의 한 유형으로, 사실(현황,통계) 관계에 충실한 핵심을 담은 정보 요약 자료 <Fact Sheet> 제작 및 전파
- SNS용 한줄 논평, 정보와 자료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인포그래픽(info-graphic), 사진, 오디오, 동영상 등 대중적이고 실용적이며 빠른 전파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 <참여연대가 바꾼 기념비적인 법안 10가지> <참여연대가 이룬 최고의 소송 10가지> <참여연대가 손잡은 사람들> <거인과 싸우다 ; 참여연대 행동방법>, <참여연대가 꾸짖은 사람들> 등 기념비적인 활동성과를 알기 쉽게 홍보하는 콘텐츠 개발
- 참여연대 전체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분석자료 제공
- <부패방지법 제정 6년의 기록>,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 운동의 기록>,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 : 2004, 2010년> 등 20주년 백서 편찬과 병행하여, 역대 대표사업 기록홍보 웹페이지 오픈

2. SNS 등 온라인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및 시행

- 트위터, 페이스북, 플리커(사진) 등 참여연대 SNS의 통합적인 운영 전략 수립
- 모바일을 통한 정보유통 강화
- 트위터, 페이스북 내에 참여연대 회원, 이슈별 그룹 활성화 시도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새로운 SNS에 대한 활용 방안 검토
- 위키백과, 포털사이트 지식인, 각종 백과사전 등 외부의 참여연대 소개 콘텐츠는 주

기적으로 내용 점검

3. 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리뉴얼

- 리플렛, 신입회원 소개자료, 부서소개자료, 연간 활동보고서, 영문 홍보물 등 기본 홍보물과 사업홍보 포맷 리뉴얼
- 각 활동기구의 비전과 활동을 설명하는 정책기본문서, 활동기구별 소개자료 리뉴얼

4. 회원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 2013년~2014년에 활동하는 2기 회원모니터단 구성과 정기·수시 설문조사 진행
- 활동종료한 1기 회원모니터단 대상 감사프로그램 진행

5. 자료정리 및 자료 관리 체계화

- 영구보관자료실 자료정리 및 운영 방안 재정비
- 창립초기부터 축적해온 파일자료, 인쇄물 자료, 출판도서, 홍보물, 사진, 영상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 사진, 영상자료 등 대외적으로 공개할 만한 자료의 접근 및 활용방안 기획
- 홈페이지 내에 입법·소송·발간물·기사 자료실 관리

6. 온라인 매체 개편 논의

- 홈페이지에 대한 평가와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 시작

운영기획팀

• 중기(2013-2014) 목표와 방향

- 참여연대 20년 인적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 맞춤형 후원자 관리 프로그램 연간 운영
- 주, 월, 분기, 연 단위 조직 운영·관리 시스템 안착
- 공간개선 사업 진행(20주년 위원회 사업)
- 상근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및 실행(20주년 위원회 사업)

• 2013년 주요과제

1. 참여연대 20년 인적 네트워크 강화

- 부서 임원(실행위원) 포함 임원 DB 구축 완료
- 임원간 소통 강화 방안 마련
- 임원 친목모임(신년하례회, 산행 등) 진행

2. 맞춤형 후원자 관리 프로그램 연간 운영

- 후원자 DB 구축(2차) 완료
-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관계맺기 연간 프로그램 마련 운영
- 정기 후원의 밤에 앞선 1~2회 맞춤형 행사 진행
- 정기 후원의 밤 행사 매뉴얼에 감사프로그램 보충

3. 사무처 운영 및 관리 안정

- 노사협의회 구성 완료
- 전체 간사회의 정례화를 통해 20주년 위원회 활동 공유 및 논의 참여 기회마련과 주목할만한 캠페인 경험 공유 등을 진행
- <2013년 참여연대 총람> 발행 및 사무실 운영 매뉴얼 작성
- 건물관리 격년 프로그램에 따른 2013년도분 진행(옥상 방수제 도포, 실내 바닥청소 등)

4. 사무실 공간개선

- 20주년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

5. 상근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및 실행

- 20주년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

연대활동

2013년 주요 연대 과제

- 중소기업인·청년·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 연대
- 공공서비스 민영화 감시와 대응을 위한 연대
- 교육비·주거비·통신비·이자 부담 등 4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연대
- 국민연금 개선 등 복지확충을 위한 연대
-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대
-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연대
-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한 연대
- 핵없는 사회를 위한 평화연대
- 아시아 민주화와 권력감시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연대

2013년 일정표

	3월	4월	5월	6월	7월
회원 시민 행사	신입회원한마당 지역회원 만남 행사	회원 봄소풍	신입회원한마당		신입회원한마당
			후원자 초청 행사	자원활동 감사 행사	
임원 회의		운영위원회 확대집행위원회 고문모임			운영위원회 확대집행위원회 고문모임
시민 교육	아카데미 봄강좌	아카데미 봄강좌		아카데미 여름강좌	아카데미 여름강좌
활동 기구	박근혜 정부 주거 정책 평가토론회	MB정부 5년 검찰 보고서 발간 박근혜 정부 가계 부채 정책 토론회	평화군축센터 10 주년 기념행사 광주아시아포럼 대통령기록물관리 법 관련 토론회 로스쿨 5년 운영 점검 보고서 발간	국민참여재판 도입 6년 평가 집담회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센터 개설 이동통신요금원가 분석 보고서 발간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토론회	아태지역 평화군축 국제워크숍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보고서2 발간 공공임대주택 정책 분석 보고서 발간 한국전쟁 종식 축 구 평화행동
기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토론회	사무처워크숍 청년인턴프로그램 로스쿨생실무수습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원 시민 행사		신입회원한마당	회원 가을여행	신입회원한마당	회원 송년회
		후원의 밤 행사		자원활동 감사 행사	
임원 회의			운영위원회 확대집행위원회 고문모임		
시민 교육		아카데미 가을강좌	아카데미 가을강좌		아카데미 겨울강좌
활동 기구		<p>〈열려라 국회〉 개편 오픈</p> <p>조세정의와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p> <p>전월세 문제 현황과 대안 보고서</p> <p>공직자이해충돌관련 정책토론회</p> <p>정보공개실태 보고서 및 토론회</p> <p>가계부채 현황과 대책 토론회</p>	<p>평화군축박람회</p> <p>〈세상을 바꾼 민생 희망운동, 공익소송 이야기〉 발간</p>	<p>〈평화복지국가의 조건:경제모델과 주체〉 학술행사</p> <p>노동권 탄압 관련 시민모의법정</p> <p>서바이벌 가이드 북 등 공익제보 관련 도서 출판</p>	<p>제4회 의인상 시상식 및 공익제보자의 밤</p> <p>재벌개혁 평가 보고서 발간</p> <p>불공정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한정책보고서 발간</p>
		정기국회 모니터 활동			
기타	간사직무교육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사무처 정기인사 청년인턴프로그램

2012 결산 및 2013 예산

회계감사보고
2012년 결산안
2013년 예산안

살림살이

회계감사 보고

- 회계감사보고 : 윤형근 (회계사)
- 회계기간 :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제19기)

총평

- 2012년(제19기) 회계연도 참여연대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전기(제18기) 대비 수입은 56백만 원(2.8%) 감소하였고 지출은 4백만 원(0.2%) 감소하였다. 기타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12백만 원 증가하였고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은 6백만 원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은 전기 대비 47백만 원 증가하였다.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은 50백만원이나 지출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급여 75백만원 중 50백만원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충당금(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한 금액이고 또한 감가상각비로 계상되어 있는 38백만원 역시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금 지출액은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손실보다 88백만 원 적으나 당기에 정기에·적금으로 166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차량운반구 등을 취득하는 등의 효과로 인하여 실제 가용 현금은 206백만 원 감소하였다. 대차대조표상 현금, 예금 및 기금을 포함한 당좌자산은 747백만원으로 전기 대비 67백만원 감소하였다. 회비수입은 전전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전기에도 11%가 증가하였으나 당기에는 3%가 증가하여 증가 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부정기 후원금은 크게 감소(23%)하였으며 사업수입 역시 소폭 하락(2.5%)하였다.
- 복식부기에 의한 월별 회계는 외주(외주 업체 변경)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문별 평가

1. 수입 부문

- 수입 총액의 70%를 차지하는 회비수입은 약 14억 3천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 증가하였으나 수입 총액의 20% 수준이었던 부정기후원금과 10% 수준이었던 사업수입은 각각 전년도 대비 23%, 3%가 감소하여 총 수입금액은 3% 감소하였다.

2. 지출 부문

-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지출은 전년도 대비 4백만 원 증가하였고 세부 내역 역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세부 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비 현금성 비용인 퇴직급여가 감소한 반면 현금성 지출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증가한 주요한 항목을 따져보면 복리후생비, 전력비, 회의비, 지급수수료 등 자체적으로 지출 규모를 줄이기 힘든 항목들이다.

3. 회계처리

- 2012 회계연도 회계처리는 외주방식(외주업체 변경)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2012년 결산안

손익계산서

제19기 2012년1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제18기 2011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단위: 원)

과목	제19(당)기	제18(당)기 ¹
	금액	금액
I.매출액	1,950,399,886	2,006,267,243
회비수입	1,426,966,395	1,391,383,230
정기후원금수입	12,960,000	6,000,000
부정기후원금수입	321,057,493	414,594,977
사업수입	189,415,998	194,289,036
II.매출원가		
III.매출총이익	1,950,399,886	2,006,267,243
IV.판매비와관리비	1,965,321,175	1,968,831,235
급여	1,058,058,571	1,065,473,709
상여금		-
퇴직급여	75,177,313	109,547,551
복리후생비	101,383,926	90,653,939
여비교통비	4,882,920	8,899,980
통신비	26,420,340	30,869,780
수도광열비	2,534,070	2,259,520
전력비	27,026,150	19,835,010
세금과공과금	28,576,215	19,609,660
감가상각비 ²	38,389,779	35,388,960
임차료	6,884,322	8,056,500
수선비	2,250,500	13,708,900
보험료	3,119,290	1,901,180
차량유지비	1,834,750	1,995,600
교육훈련비	5,164,240	21,228,820
도서인쇄비	5,130,020	5,168,210

회의비	30,110,850		13,093,230
사무용품비	8,814,600		5,563,840
소모품비	26,985,920		47,256,270
지급수수료	74,010,266		42,230,840
건물관리비	13,270,300		13,150,200
잡비	12,407,910		451,161
사업비	369,128,283		366,775,735
발송비	5,794,240		6,751,640
부설기관회비등	37,966,400		38,961,000
V.영업이익		(14,921,289)	37,436,008
VI.영업외수익		20,092,511	7,797,462
이자수익	14,366,547		6,301,804
잡이익	5,725,964		1,495,658
VII.영업외비용		55,015,303	48,727,528
이자비용	36,423,179		38,827,037
기부금	11,667,400		9,825,000
잡손실	6,924,724		75,491
VIII.법인세차감전이익		(49,844,081)	(3,494,058)
IX.법인세등³		513,710	
X.당기순이익		(50,357,791)	(3,494,058)

1 전기(2011년) 비교표시된 재무제표는 전기오류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된 것입니다.

2 감가상각비 당기 계상액은 건물 및 차량운반구의 당기 상각비입니다.

3 당기 수익사업 부문 법인세 비용 계상액입니다.

재무상태표

제19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18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제19(당)기		제18(전)기 ⁴	
	금액		금액	
자산				
I. 유동자산	747,217,228		814,329,967	
(1) 당좌자산	747,217,228		814,329,967	
현금	3,531,286		1,758,193	
보통예금	364,752,819		572,615,171	
정기예·적금	221,960,315		55,885,120	
상근자교육기금	22,311,057		6,709,878	
연대기금	1,549,913		2,547,406	
퇴직기금			72,044,159	
도시락기금	9,027,863		5,693,841	
참여사회기금			10,704	
의인가금	99,343,855		96,490,061	
공익소송기금	24,740,120		575,434	
선급금				
단기대여금				
II. 비유동자산	3,918,045,211		3,929,820,180	
(1) 투자자산	30,000,000		30,000,000	
장기대여금 ⁵	30,000,000		30,000,000	
(2) 유형자산	3,888,045,211		3,899,820,180	
토지	2,634,664,824		2,634,664,824	
건물	1,415,558,436		1,415,558,436	
감가상각누계액	(185,792,040)	1,229,766,396	(150,403,080)	1,265,155,356
차량운반구	26,614,810			
감가상각누계액	(3,000,819)	23,613,991		
자산총계	4,665,262,439		4,744,150,147	
부채				

I.유동부채	9,335,385	13,110,347
미지급금		
예수금	7,968,041	12,791,962
부가세예수금	853,634	318,385
단기차입금		
미지급세금	513,710	
가수금		
II.비유동부채	912,092,959	936,847,914
장기차입금	650,000,000	65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52,092,959	276,847,914
장기임대보증금	10,000,000	10,000,000
부채총계	921,428,344	949,958,261
자본총계	3,743,834,095	3,794,191,886
당기순이익(손실)		
당기: (50,357,791)		
전기: (3,494,058)		
부채및자본총계	4,665,262,439	4,744,150,147

4 전기(2011년) 비교표시 된 재무제표는 전기오류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된 것입니다.

5 장기대여금은 참여사회연구소에 대한 대여금액입니다.

2013년 예산안

예산손익계산서

제20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20(차)기	
	금액	
I.매출액		2,029,000,000
회비수입	1,485,000,000	
정기후원금수입	14,000,000	
부정기후원금수입	330,000,000	
사업수입	200,000,000	
II.매출원가		
III.매출총이익		2,029,000,000
IV.판매비와관리비		2,135,238,869
급여	1,130,000,000	
상여금		
퇴직급여	20,000,000	
복리후생비	122,000,000	
여비교통비	5,000,000	
통신비	29,000,000	
수도광열비	3,000,000	
전력비	28,000,000	
세금과공과금	24,000,000	
감가상각비	46,038,869	
임차료	8,000,000	
수선비	4,000,000	
보험료	4,000,000	
차량유지비	4,000,000	
교육훈련비	5,000,000	
도서인쇄비	5,200,000	

회의비	25,000,000	
사무용품비	10,000,000	
소모품비	30,000,000	
지급수수료	70,000,000	
건물관리비	17,000,000	
잡비	2,000,000	
사업비	500,000,000	
발송비	6,000,000	
부설기관회비등	38,000,000	
V.영업이익		(106,238,869)
VI.영업외수익		14,000,000
이자수익	12,000,000	
잡이익	2,000,000	
VII.영업외비용		48,000,000
이자비용	37,000,000	
기부금	10,000,000	
잡손실	1,000,000	
VIII.법인세차감전이익		(140,238,869)
IX.법인세등		
X.당기순이익		(140,238,869)

예산재무상태표

제20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제20(차)기	
	금액	
자산		
I.유동자산		663,581,843
(1)당좌자산		663,581,843
현금		2,540,000
보통예금		309,081,528
정기에.적금		221,960,315
상근자교육기금		20,000,000
연대기금		5,000,000
퇴직기금		
도시락기금		1,000,000
참여사회기금		
의인기금		102,000,000
공익소송기금		2,000,000
선급금		
단기대여금		
II.비유동자산		3,872,006,342
(1)투자자산		30,000,000
장기대여금		30,000,000
(2)유형자산		3,842,006,342
토지		2,634,664,824
건물	415,558,436	
감가상각누계액	(221,181,000)	1,194,377,436
차량운반구	26,614,810	
감가상각누계액	(13,650,728)	12,964,082
자산총계		4,535,588,185
부채		

I.유동부채		9,900,000
미지급금		
예수금		9,000,000
부세예수금		900,000
단기차입금		
미지급세금		
가수금		
II.비유동부채		922,092,959
장기차입금		65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62,092,959
장기임대보증금		10,000,000
부채총계		931,992,959
자본총계		3,603,595,226
당기순이익(손실)		
당기: (140,238,869)		
전기: (50,357,791)		
부채및자본총계		4,535,588,185

정관 개정

정관개정안
참여연대 정관
기구표

조직과 운영원리

정관개정안

□ 개정 이유

- 고문의 임기 규정 신설
- 현재 고문단의 구성을 반영하여 고문의 범위 확대

□ 개정안

참여연대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정관 제25조[고문]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집행위원장단으로”를 “집행위원장단 등으로”로, “전직 임원”을 “전직 임원 등”으로 함. 같은 조 제2항으로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

부 칙

- ① (효력발생)이 정관은 2013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② (고문의 임기 적용례) 2013년 2월 22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고문단은 2013년 총회에서 새로 추대된 것으로 본다.

※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 [고문]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5조 [고문] ①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u>집행위원장단 등으로</u> 활동한 전직 <u>임원 등을</u>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u>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

참여연대 정관 (개정 후)

참여연대 정관

1994.9.10	(제정)
1995.3.23	(1차 개정)
1996.3.13	(2차 개정)
1997.9.10	(3차 개정)
1998.9.27	(4차 개정)
1999.2.6	(5차 개정)
2000.2.19	(6차 개정)
2001.2.10	(7차 개정)
2002.2.23	(8차 개정)
2003.3.15	(9차 개정)
2005.3.12	(10차 개정)
2006.2.25	(11차 개정)
2006.9.13	(12차 개정)
2007.3.3	(13차 개정)
2011.3.5	(14차 개정)
2012.2.25	(15차 개정)
2013.2.23	(16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참여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2.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5.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6.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제5조 [소재] 참여연대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가입] ① 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②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참여연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임협의회] ① 참여연대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참여연대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1조 [지위] 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2조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고문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5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16조 [임기]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직 집행위원,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회원 모임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를 임명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21조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2조 [임기] ①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선출직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 ①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 감사

제24조 [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고문] ①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 등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 등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 ①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절 정책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제27조 [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과 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8조 [정책자문위원회] ① 참여연대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9조 [활동기구] ① 참여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각 활동기구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처] ①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1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협동사무처장]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고,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처장과 같다.

제6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33조 [지역조직]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4조 [부설기관]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

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35조 [회계 연도] 참여연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예산과 결산]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37조 [수입] 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 5 장 해 산

제38조 [해산 사유] 참여연대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9조 [해산 절차]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0조 [잔여 재산의 귀속] 참여연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참여연대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6 장 보 칙

제41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①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② 주요 임원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42조 [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3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3월 1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9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9월 2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6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2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2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3월 1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12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9월 13일 임시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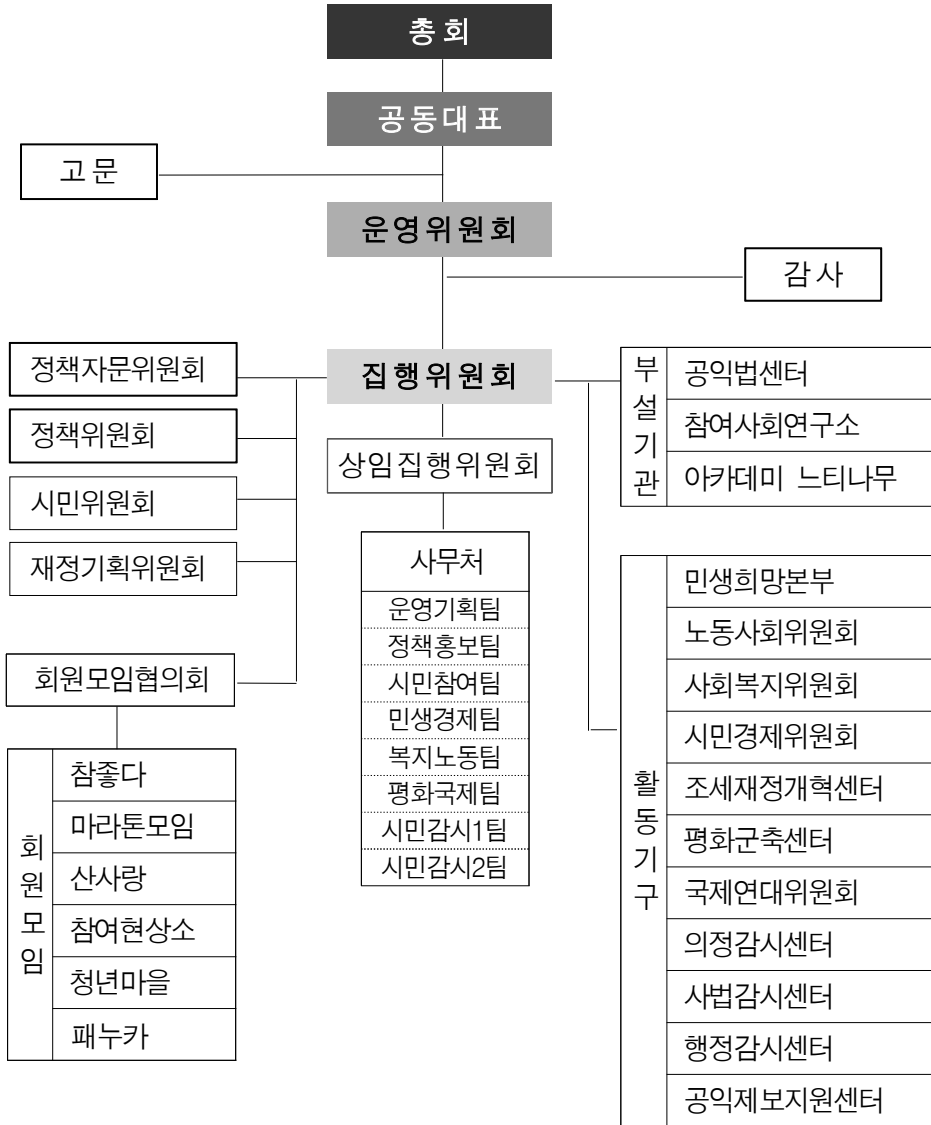
이 정관은 2013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 ① (효력발생) 이 정관은 2013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② (고문의 임기 적용례) 2013년 2월 22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고문단은 2013년 총회에서 새로 추대된 것으로 본다.

기구표

2013. 2. 23. 현재



임원 선임

임원선임안
2013년 임원 명단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임원선임안

1. 고문 추대의 건

[신임] 청화(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2. 공동대표 선출의 건

[연임] 이석태(변호사, 2011~2012 참여연대 공동대표)

3. 운영위원장 선출의 건

[연임] 한상희(건국대 교수, 2011~2012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신임] 진영중(성공회대 교수, 아카데미 느티나무 운영위원장)

4. 선출직 운영위원 선출의 건 (총 84명)

○ 일반 선출직 운영위원 (47명)

[연임] 김대현(자영업) 김봉수(자영업) 김상균(방송인) 김영수(과학자) 김종백(직장인) 맹행일(자원활동가) 박상규(직장인) 박상철(직장인) 박정진(직장인) 박종희(사업가) 석락희(직장인) 성승택(직장인) 윤희준(직장인) 이영구(장기 회원) 이영기(가락수산시장 중매인) 이옥수(자영업) 이적(목사) 이한나(직장인) 이해숙(수필가) 장연희(자원활동가) 장정아(자원활동가) 정광교(출판업) 조룡상(직장인) 지관(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채명묵(자원활동가) 최수근(활동가) 하원상(직장인) 한명희(자영업) 한승호(치과의사) 허필두(직장인) 홍남숙(자영업) 홍천희(자원활동가) (이상 32명)

[신임] 구봄(대학생) 김민혜(자원활동가) 김영규(교사) 김영수(자영업) 김용기(자영업) 민경(대학생) 박열음(자영업) 박지영(피아노 강사) 신영(디자인회사 운영) 오종철(직장인) 임상웅(자영업) 장슬기(대학생) 조민지(자원활동가) 피학용(자영업) 황미정(컨텐츠 기획자) (이상 15명)

○ 추천으로 선임하는 선출직 운영위원 (37명)

[연임] 김돈중(세무사) 김석준(직장인) 김태엽(자영업) 김하영(대학생) 문새미(직장인) 박인효(자영업) 박혜연(직장인) 송혜련(직장인) 양재섭(직장인) 이소영(연구원) 조규훈(직장인) 조우진(직장인) 최종임(직장인) 한용환(직장인) (이상 14명)

[신임] 곽현희(어린이집 교사) 김명수(홍익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김성제(공무원) 김요한(직장인) 남경완(어린이북 출판작가) 마석우(변호사) 박찬주(평화누리 공동대표) 박창근(관동대학교 교수) 서은숙(연구원) 오지영(대안학교 교사) 윤지혜(공무원) 이강원(직장인) 이정현(직장인) 이종춘(경북과학대학 교수) 이해정(중앙대학교 교수) 정대철(목포포럼 사무차장) 정문영(회계사) 조재현(한국은행 직원) 조정숙(직장인) 지정국(직장인) 최중훈(직장인) 한보리(인도주의적활동가) 홍부호(직장인) (이상 23명)

5. 당연직 운영위원 승인의 건

이석태(공동대표) 진영중(운영위원장) 한상희(운영위원장) 김남근(집행위원장) 김진욱(집행위원장) 김성진(집행위 부위원장) 박경신(집행위 부위원장) 이태호(사무처장) 박근용(협동사무처장) 안진걸(협동사무처장) 이승희(협동사무처장) 김영근(회원모임 '산사랑' 대표) 박진호(회원모임 '청년마을' 대표) 홍의표(회원모임 '참 좋다' 대표)

2013년 임원 명단

공동대표

김균(고려대 교수) 이석태(변호사)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감사

윤형근(회계사)

고문

김중배(언론인) 김창국(변호사) 명진(스님) 박상증(목사)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안경환(서울대 교수)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이삼열(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이선종(원불교 중앙훈련원 원장) 임현영(민족문제연구소장) 장임원(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주종환(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청화(청암사 주지스님) 최영도(변호사) 홍성우(변호사)

운영위원회

- 위원장 : 진영종(성공회대 교수) 한상희(건국대 교수)
- 부위원장 :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홍성태 (상지대 교수)
- 당연직 운영위원

김균(공동대표) 이석태(공동대표) 정현백(공동대표) 진영종(운영위원장) 한상희(운영위원장) 김정인(운영위 부위원장) 홍성태(운영위 부위원장) 김남근(집행위원장) 김진욱(집행위원장) 김성진(집행위 부위원장) 박경신(집행위 부위원장) 임종대(정책자문위원장) 이태호(사무처장) 박근용(협동사무처장) 안진결(협동사무처장) 이승희(협동사무처장) 김영근(회원모임 '산사랑' 대표) 맹봉학(회원모임 '마라톤모임' 대표) 박진호(회원모임 '청년마을' 대표) 최상천(회원모임 '참여현상소' 대표) 홍의표(회원모임 '참좋다' 대표)

* 당연직은 참여연대 직책을 표기함

○ 선출직 운영위원

- 일반 선출직 운영위원

구봄(대학생) 김대현(자영업) 김민혜(자원활동가) 김봉수(자영업) 김상균(방송인) 김영규(교사) 김영수(과학자) 김영수(자영업) 김용기(자영업) 김종백(직장인) 맹행일(자원활동가) 민경(대학생) 박상규(직장인) 박상철(직장인) 박열음(자영업) 박정진(직장인) 박종희(사업가) 박지영(피아노 강사) 석락희(직장인) 성승택(직장인) 신영(디자인 회사 운영) 오종철(직장인) 윤희준(직장인) 이영구(장기 회원) 이영기(가락수산시장 중매인) 이옥수(자영업) 이적(목사) 이한나(직장인) 이해숙(수필가) 임상웅(자영업) 장슬기(대학생) 장연희(자원활동가) 장정아(자원활동가) 정광교(출판업) 조룡상(직장인) 조민지(자원활동가) 지관(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 채명목(자원활동가) 최수근(활동가) 피학용(자영업) 하원상(직장인) 한명희(자영업) 한승호(치과의사) 허필두(직장인) 홍남숙(자영업) 홍천희(자원활동가) 황미정(컨텐츠 기획자)

- 추천으로 선임하는 선출직 운영위원

곽현희(어린이집 교사) 김돈중(세무사) 김명수(홍익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김석준(직장인) 김성제(공무원) 김요한(직장인) 김태엽(자영업) 김하영(대학생) 남경완(어린이북 출판작가) 마석우(변호사) 문새미(직장인) 박인효(자영업) 박찬주(평화누리 공동대표) 박창근(관동대학교 교수) 박혜연(직장인) 서은숙(연구원) 송혜련(직장인) 양재섭(직장인) 오지영(대안학교 교사) 윤지혜(공무원) 이강원(직장인) 이소영(연구원) 이정현(직장인) 이종춘(경북과학대학 교수) 이해정(중앙대학교 교수) 정대철(목포포럼 사무차장) 정문영(회계사) 조규훈(직장인) 조우진(직장인) 조재현(한국은행 직원) 조정숙(직장인) 지정국(직장인) 최종임(직장인) 최종훈(직장인) 한보리(인도주의적활동가) 한용환(직장인) 홍부호(직장인)

집행위원회

○ 위원장 : 김남근(변호사) 김진욱(변호사)

○ 부위원장 : 김성진(변호사,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신(고려대 교수, 공익법센터 소장)

○ 선출직 집행위원

박영선(사회학 박사,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조형수(변호사, 민생희망본부 서민희망사업단장) 신진욱(중앙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편집위원) 장유식(변호사, 행정감시센

터 소장) 최영태(회계사, 전 조세개혁센터 소장) 이찬진(변호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하태훈(고려대 교수, 전 사법감시센터 소장)

○ 당연직 집행위원

김균(공동대표) 이석태(공동대표) 정현백(공동대표) 진영중(운영위원장) 한상희(운영위원장) 김정인(운영위 부위원장) 홍성태(운영위 부위원장) 김남근(집행위원장) 김진욱(집행위원장) 김성진(집행위 부위원장) 박경신(집행위 부위원장) 임종대(정책자문위원장) 이태호(사무처장) 박근용(협동사무처장) 안진걸(협동사무처장) 이승희(협동사무처장)

강병구(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김창준(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박경신(공익법센터 소장) 서보학(사법감시센터 소장) 양영미(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국제연대위원회 ODA 정책위원회 위원장) 양운재(재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장유식(행정감시센터 소장) 이남주(평화군축센터 소장) 이상훈(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진(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현욱(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임상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성대(의정감시센터 소장) 주은경(아카데미 느티나무 운영위 부위원장) 홍윤기(참여사회연구소 소장)

* 당연직은 참여연대 직책만 표기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임종대(한신대 교수, 전 공동대표)

사무처

○ 사무처장 : 이태호

○ 협동사무처장 : 박근용 안진걸 이승희

회원현황
시민참여/문화프로그램
시민교육
감시와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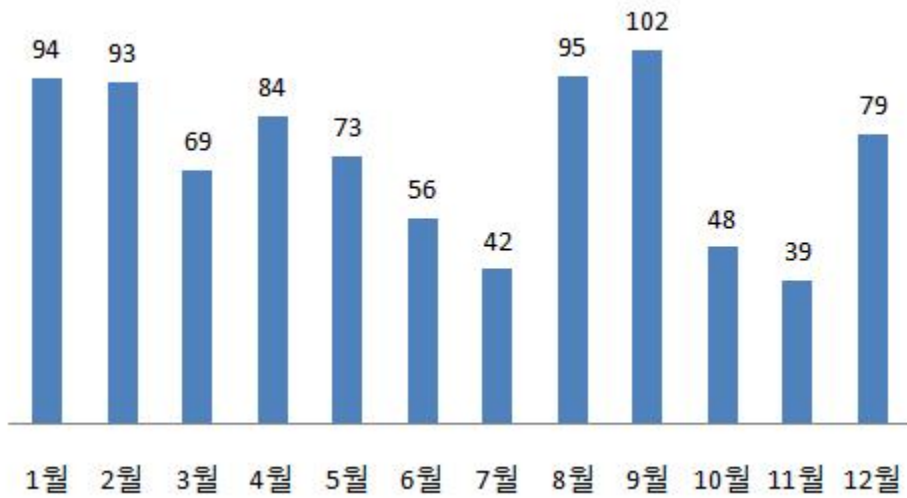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참여연대 2012

회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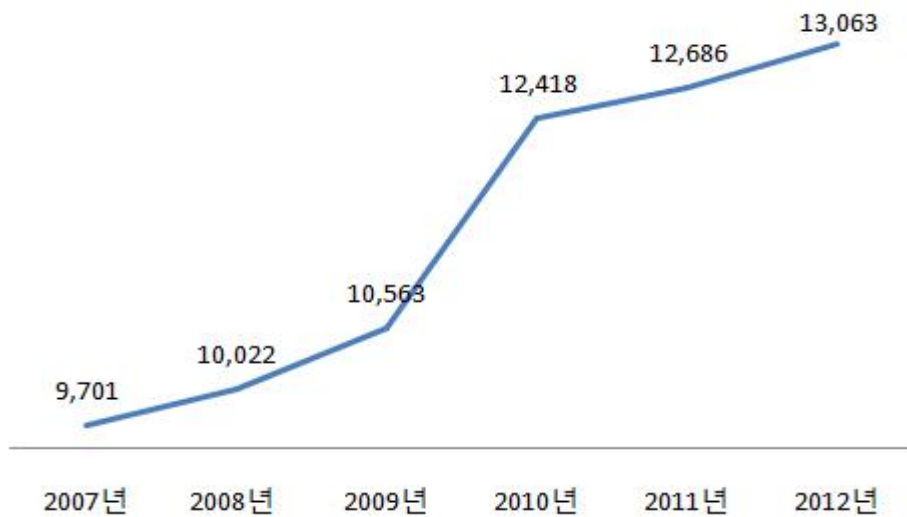
○ 2012년 12월말 기준 회원 수 : 13,063명

○ 2012년 중 가입 회원 수 : 87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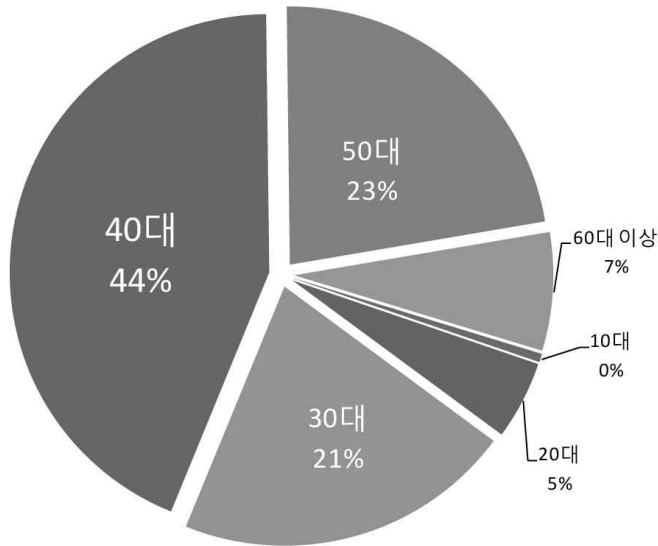
□ 2012년 월별 가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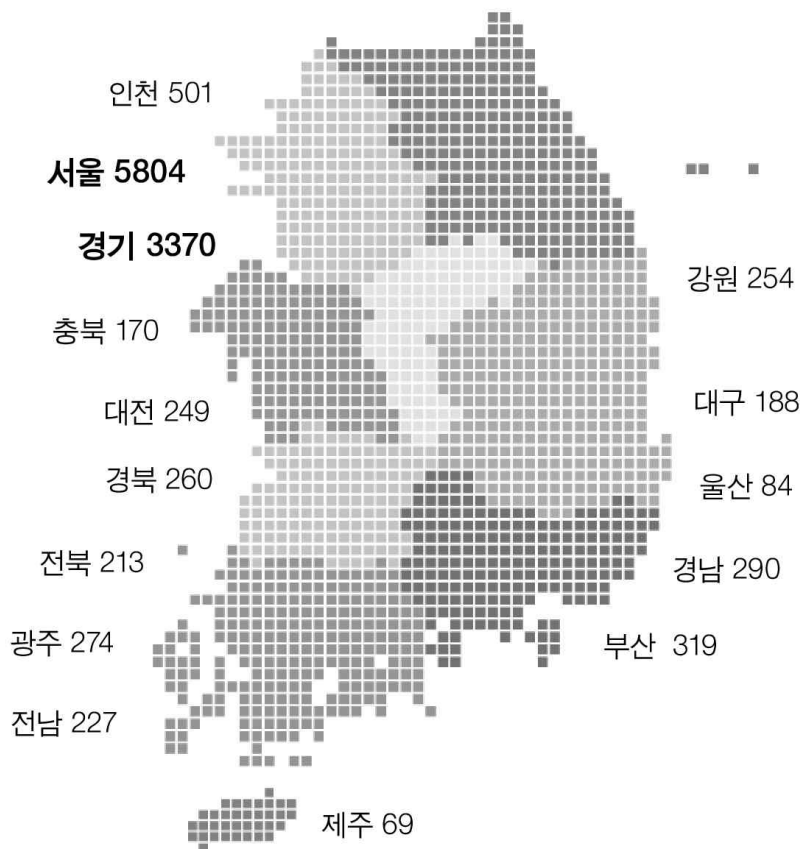
□ 연도별 회원 수 추이



□ **연령·지역별 회원분포** (2012년 말 기준)



회원가입 정보를 기준으로 나이를 파악할 수 있는 회원 12,795명만을 대상으로 함



회원정보 중 우편물 수령 주소를 기준으로 하여, 실거주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시민참여/문화프로그램

□ 회원 행사

총회	1회	2월 제18차 정기총회
신입회원한마당	6회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봄나들이	1회	4월 부암동 역사문화 나들이
가을여행	1회	11월 회원 가을 여행 : 전북 정읍
지역회원한마당	5회	3월 광주 대전 대구 부산 10월 순천
감사행사	1회	4월 자원활동가 초청 미니콘서트
회원자녀 초청 행사	1회	8월 시민운동 배우고 자원활동 하고
송년회	1회	12월 회원 송년회



2012년 4차 신입회원한마당 (2012. 7. 26)



전북 정읍으로 떠난 회원 가을여행 (2012. 11. 10~11)

□ 자원활동

2012년 중 자원활동에 참여한
자원활동가 총 147 명



2012년 1차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2012. 2. 29)

□ 청년 인턴 프로그램

10기 인턴

2012. 7. 3. ~ 8. 14. 총 200시간
27명 수료

11기 인턴

2013. 1. 2. ~ 2. 5. 총 160시간
25명 수료



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인턴들 (2012. 8. 9)

□ 참여연대 방문 프로그램

중고등학생 15회

대학(원)생 12회

시민단체 활동가 및 일반 2회

해외단체 등 20회

- 2012년 중 방문자 총 355명



참여연대를 방문한 송화초등학교 학생들 (2012. 9. 26)

□ 전시회 (19회)



숨은 서울 찾기 展,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서울드로잉 3기 졸업작품전 (2012. 6)

- 2/27 아카데미 캐리커처 교실 수강생 졸업작품전
- 3/20 어슬렁의 여행드로잉 그리고 이야기
- 6/15 떠난 보금자리, 지축 사진전
- 6/22 숨은서울찾기展,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 서울드로잉 3기 졸업작품전
- 7/6 자화자찬전, 고경일 배민정의 풍자그림학교 졸업작품전
- 8/3 고경일 카툰전 서울 2012
- 8/13 혜원혜민이의 마음대로 상상전
- 8/20 토토로와 어깨동무전
- 9/1 그림자1호전
- 9/17 임종진 작가 초청 사진전 '상처와 평화사이'
- 9/24 김영란 흙놀이
- 10/5 진재원 개인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전'
- 10/12 플로리스트 신창희 개인전 '기억 꽃이 되다II'
- 10/19 귀여운 독재자들 by LEE HA
- 11/16 소풍_신영 그림전
- 11/23 행복의 조건, 이영동 사진전
- 12/7 서울드로잉전
- 12/13 창작 드로잉전 식식식
- 12/21 이선미 염색공예전 천, 염색, 실

□ **연주회** (3회)

- 2/18 고음악 기타 앙상블 <바흐와 동시대 작가들>
- 8/18 필로스 기타 연주회
- 8/25 바로크 앙상블 <프로세토 팔코니에리>



고음악 기타 앙상블 <바흐와 동시대 작가들> 연주회 (2012. 2. 18)

□ **저자와의 만남** (3회)

- 9/20 『이완용 평전』 저자 김윤희
- 10/17 『푸른 눈, 갈색 눈』 역자 김희경
- 11/21 『북극곰은 걷고 싶다』 저자 남종영

□ **역사 답사** (4회)

- 4/21 서촌 근현대 문화예술 _ 옥인동 일대
- 5/19 서촌 근현대 정치경제 _ 효자, 통의동 일대
- 10/18 서촌 문화와 문명의 교류현장
- 11/3 정동 근대 역사와 외교의 각축장



근대 역사와 외교의 각축장 '정동' 역사탐방 (2012. 11. 3)

□ **영화상영** (8회)

- 3/14 <핵의귀환> 초대 손님 _ 양이원경 환경운동연합기후에너지국장
- 4/12 <트럭농장> 초대 손님 _ 김성희 살림이야기 편집장
- 5/16 <태양광 택시로 세계일주를> 초대 손님 _ 김영우 환경영화제 프로그래머
- 6/13 <행복의 경제학> 초대 손님 _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 9/12 <만약 나무가 쓰러지면> 초대 손님 _ 이태호 사무처장
- 10/10 <웨이스트 랜드>
- 11/14 <얼음의 땅, 깃털의 사람들>
- 12/12 <인류문명 오디세이>

시민교육

- 아카데미 느티나무 총 50개 강좌 개설, 수강생 1천여 명

□ 강좌목록

시기	구분	강좌명	강의횟수	참가자
겨울	민주주의학교	한국 기독교로 보는 한국사회의 맨 얼굴	5회	21명
		위기의 시대, 다른 금융을 상상하다	5회	35명
	생활문화학교	고경일, 김부일의 캐리커처 교실	12회	16명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초급반 9기	5회	16명
굿모닝세미나	나카자와 신이치 '신화와 대칭성 인류학' 세미나	7회	12명	
봄	오픈 특강	희망버스 김진숙이 말하는 희망과 배움	1회	71명
	5.18 특강	오월은 다시 창조적 고통이 필요하다 화가 홍성담	1회	26명
	참소	초대손님 <파업자들>	1회	20명
	민주주의학교	2012 한반도 평화구상	7회	26명
		Rio정상회의, 이면과 진실	3회	24명
		시민정치의 고전으로 오늘을 읽는다	6회	27명
	인문학교	문학으로 읽는 이슬람 사회와 문화	6회	30명
		교과서 저자와 함께 읽는 한국 근현대사 I	10회	42명
		공동체, 그 매력과 두려움	6회	23명
		문명 안으로 : 근대문명에 대한 성찰	7회	36명
생활문화학교	임종진 사진수업 4기 : 자신에게 사진을 건네다	12회	13명	
	내 안의 의사 만나기, LIGHT-SELF	10회	9명	
	고경일 김부일의 서울드로잉 3기	12회	21명	
	고경일 배민정의 풍자그림학교	14회	10명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초급반 10기	5회	14명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중급반 3기	5회	9명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초급반 11기	5회	14명	
	굿모닝세미나	몸 워크숍 :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9회	14명
		꿈 투사 워크숍 : 성찰과 치유를 위한 꿈작업	10회	20명
		감성적 인간, 호모 에스테티쿠스를 위한 일곱개의 열쇠	7회	24명
스타일링 워크숍 2기		6회	6명	

여름	인문학교	인문정치와 현대사	5회	21명
	민주주의학교	반란의 소리, 저항의 노래	3회	26명
	참소	나도강사다 : 청조적사고를 위한 마인드맵	1회	36명
		표현의 자유를 찾는 사람들 : 박경신 교수 최승호 피디	1회	26명
가을	민주주의학교	재벌 공화국을 넘어	5회	27명
		세계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	4회	25명
		위험사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6회	18명
		진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5회	16명
		아시아 시민사회활동가와 함께하는 생생토크	7회	19명
		교사, 교육활동가 평화교육 워크숍	6회	16명
		워크숍 : 소심한 사람들의 유쾌한 꿈지락	6회	21명
	인문학교	교과서 저자와 함께 읽는 한국근현대사II	11회	37명
		문학으로 읽는 중남미 역사와 문화	5회	35명
	생활문화학교	임종진사진수업 5기	12회	13명
		LIGHT 워크숍 특강 몸의 상징으로 보는 남녀의 차이	1회	8명
		LIGHT 워크숍 내안의 의사 만나기	10회	16명
		서울드로잉 4기	12회	19명
		배민정의 창작일러스트	12회	15명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초급 12기	5회	6명
		쉽게 즐기는 우쿨렐레 교실 중급 4기	5회	9명
		굿모닝세미나	6인의 여성예술가, 6가지 정체성	6회
	꿈 투사 워크숍		10회	20명
	스타일링 워크숍 3기		6회	5명
	몸 워크숍 :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8회	12명
합계			329회	1,045명



오픈특강 <김진숙이 말하는 희망과 배움> (2012. 2. 29)

감시와 정책제안

□ 활동 통계

구분	내용	활동량*
정책/분석자료	이슈리포트	32
	보고서/분석자료/의견서 등	69
	자료집/단행본	8
	정책협약	5
	공개질의	32
	계	146
토론회	토론회/좌담회/포럼/심포지엄/워크숍 등	102
입법청원/입법발의	입법청원	23
	입법발의(의원 공동발의)	6
	계	29
소송	형사소송	6
	행정소송	3
	민사소송	3
	헌법소원	1
	계	13
행정처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감사청구/조사요청 등	12
	정보공개청구**	6
	행정심판 청구	7
	민원/진정	2
	계	27
성명/논평	성명/논평	346
직접행동	집회/시위/촛불문화제 등	162
	캠페인·서명운동	25
	기자회견	66
	면담·방문	3
	계	256
기획행사	의인상 시상식/평화박람회/영화제 등	14
미디어기획	언론공동기획	15
	언론광고	2
	여론조사	4
	칼럼·기고	85
	계	106

*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 분류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슈제기를 위한 기획 정보공개청구 건수로, 단순 자료수집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는 제외

□ 보고서

대선 정책·공약 평가 리포트

- 9/27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서
- 10/18 NLL(북방한계선) 쟁점과 대안
- 10/29 주요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평가
- 11/6 2012 대선 유권자를 위한 검찰개혁 공약 평가
- 11/7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표현의 자유 6대 정책
- 11/11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6
- 11/16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 11/18 주요 대선후보별 최저임금정책 비교·평가
- 11/19 주요 대선후보별 보육정책 비교·평가
- 11/20 군복무기간단축과 병력감축 : 중단된 군복무기간 단축, 멈춘 국방시계
- 11/20 2012대선,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11/23 주요 대선후보별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평가
- 11/23 주요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 정책 비교·평가
- 12/3 박근혜 문재인 대선후보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정책 평가
- 12/6 노동권 관련 주요 대선후보 공약 비교·평가
- 12/12 주요 대선후보별 보건의료 정책 비교·평가
- 12/12 각 정당 대선후보 가계부채,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비교·평가
- 12/12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의 기초생활보장정책 비교·평가
- 12/13 주요 대선후보의 반부패/정부투명성 정책공약 평가
- 12/13 대선후보 등록금 관련 정책 평가
- 12/17 주요 대선후보 한반도·외교통상·국방정책 비교 및 평가

이슈리포트

- 2/15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 2/28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 3/29 2012 핵군축보고서
- 3/29 저축은행 5대 정책실패 · 책임관료 26인
- 5/10 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 6/18 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
- 7/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 9/6 경제민주화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참여연대 정책보고서
- 10/18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2
- 11/1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 11/28 주식백지신탁제도 7년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

정책보고서/자료집

- 1/26 2012 한국사회 개혁 방향과 과제
- 2/6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모니터 보고서
- 3/15 노동에 대한 보호, 인간 존엄성 확보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 보고서
- 4/5 각 정당 복지정책 평가보고서
- 6/12 19대 국회 2012년 입법 및 청문회 과제
- 9/9 민관협력 통한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득인가 독인가
- 10/14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
- 11/7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 입법청원/입법발의

- 1/5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청원
- 2/14 서울 대형마트·SSM 일요일 의무휴업 조례안 발의
- 2/27 파생상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소득세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청원
- 2/29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청원
- 6/2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
- 7/18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청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원
호의보증 폐해근절 위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청원
이자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청원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원
불법채권추심 근절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원
- 8/14 모욕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 8/21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청원, 발의(8.23)
- 8/24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9/4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삭제 등의 형법 개정안 청원
- 9/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안 청원
- 9/13 정책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청원
- 10/4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청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원
반값등록금 실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청원
- 10/5 무분별한 사립대 적립금 규제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청원
- 11/1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청원
- 11/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발의

-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 발의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보금자리건설특별법 개정안 발의
- 11/15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청원

□ 소송

- 1/9 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헌심판 제청
- 1/18 서울고법에 현재의 공직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 2/6 론스타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추가고발
- 3/28 감사원 국민·공익감사청구 통지문 비공개 판결에 항소
- 4/5 고현철 전 대법관 수임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
- 7/2 10.26 재보선 당시 선관위 트래픽·라우터 기록에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 7/24 론스타 상대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제기
- 8/21 기성희비 부당징수 강행, 교과부 장관 및 국공립대 총장 고발
- 9/25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원가 관련 판결에 대한 항소
- 9/25 4대강범대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등으로 공정위원장 등 고발
- 10/10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11/29 대한항공 등에 시각 장애인 웹접근성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 12/13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차 정몽준 회장 고발

□ 행정처분

- 2/29 2011.10.26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스장애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심판청구
- 3/7 위스키 RFID 태그 관련 국세청 고지와 직무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3/21 KTX 민영화 관련 국토해양부,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4/23 7대자연경관 선정 시, KT 불법·부당 행위 묵인·방조한 방통위 감사청구

- 5/11 세계7대경관 관련 KT의 표시·광고 법률위반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 5/22 세계7대경관 전화 사기의혹 신고 KT새노조위원장 보호조치신청
- 6/20 주식백지신탁위 연도별 심사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 6/21 의사협회 진료거부에 대해 공정위 신고서 제출
- 7/13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청구
- 7/16 부산지점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 7/19 농심의 대리점 노예계약 횡포와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서 제출
- 8/15 재벌유통업체 비호하는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처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10/23 웨미리마트의 가맹사업법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서 제출
- 11/5 (주)한국타이어 가맹사업인 T/Station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서 제출
- 11/11 한일군사협정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 12/4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서 제출

□ 단행본/정기간행물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참여사회연구소 | 조홍식 (썬은이) | 이매진 | 18,000원 | 2012-07-27

고장난 나라 수선합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55가지 키워드
 참여연대 | 이매진 | 17,000원 | 2012-12-10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연대
 참여사회연구소 | 윤홍식 (썬은이) | 이매진 | 2012-12-20

참여사회 1월~12월호 참여연대 | the DNC

복지동향 1월~12월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나눔의 집

시민과 세계 제21호 참여사회연구소 | 이매진 | 2012-07-16

회원 설문조사 결과
참여연대 노래

부록

회원 설문조사 결과

회원모니터단, 참여연대 2012년을 평가하다

참여연대는 올해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회원들의 평가와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8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회원모니터단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2년 활동평가와 2013년 활동방향, 그리고 1기 회원모니터단 활동 평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422명의 회원모니터단 중 207명(응답률 49%)이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설문은 지난 2년간 활동해주신 1기 회원모니터단의 마지막 설문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주시고 귀중한 의견을 주신 1기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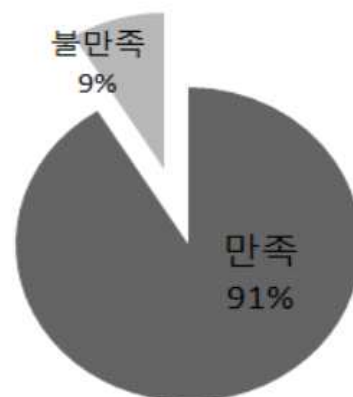
회원모니터단 참여연대 회원 중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500명을 추첨하여 모니터단을 구성합니다. 회원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이며, 연4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 2012년 참여연대 활동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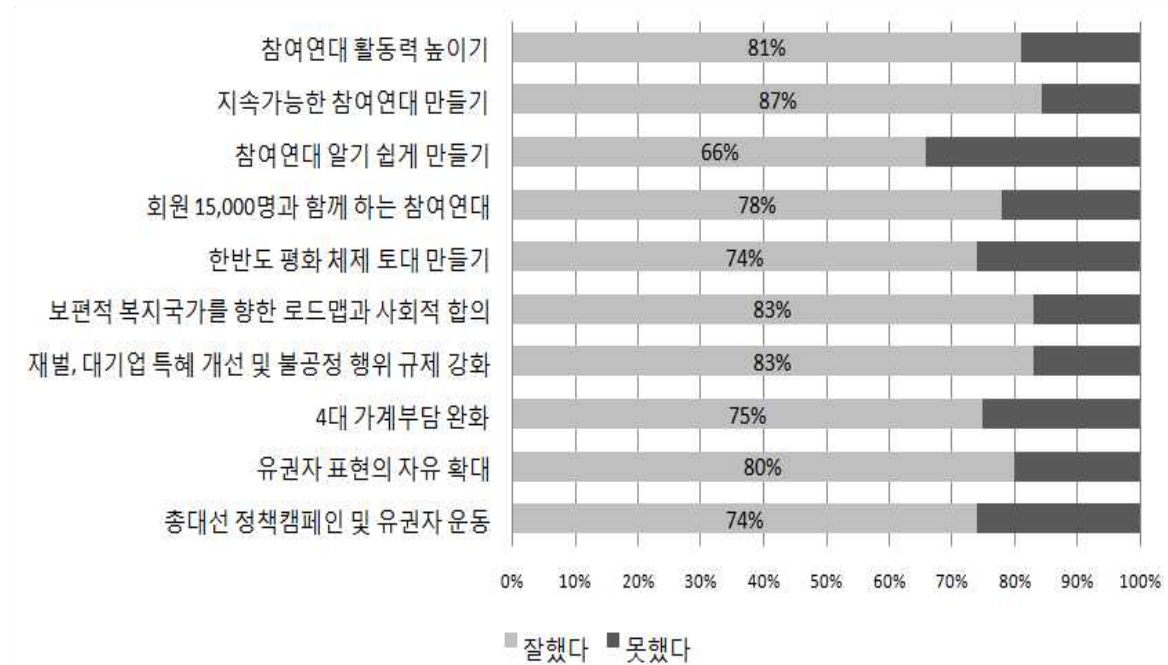
Q1. 회원님께서서는 2012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회원모니터단은 2012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매우만족 18% + 만족스러운 편이다 73%)고 평가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2012년 총회에서 발표한 6대 중점 과제와 4대 발전과제 수행에 대해서도 대체로 '잘했다'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불만족하다고 답하신 분들은 '공감대 형성 부족', '너무 온건한 활동',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함', '대선 관련 활동 부족' 등을 그 이유로 적어주셨습니다.



Q2. 참여연대가 작년 제18차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6대 중점과제와 4대 발전과제를 한 해 동안 얼마나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2012년 참여연대가 가장 잘 한 활동

2012년 참여연대가 진행한 대표적인 활동 27개 중 가장 잘한 활동으로는 '정치검사 명단 발표 등 검찰개혁 운동'(110명)이 뽑혔습니다. 이어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98명),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운동'(87명), '인터넷실명제 위헌소송 승소 등 표현의 자유 확대 운동'(76명) 등이 꼽혔습니다.

Q3. 2012년에 진행한 대표적인 활동 중 가장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5개 응답)



2012년 대표적인 시민·회원 사업 중 가장 잘한 활동으로는 ‘<아카데미 느티나무> 시민 강좌 사업’(124명)이 꼽혔고 이어서 ‘작은 전시회, 음악회, 영화상영 등 문화행사’(67명), ‘지역회원 만남 행사(61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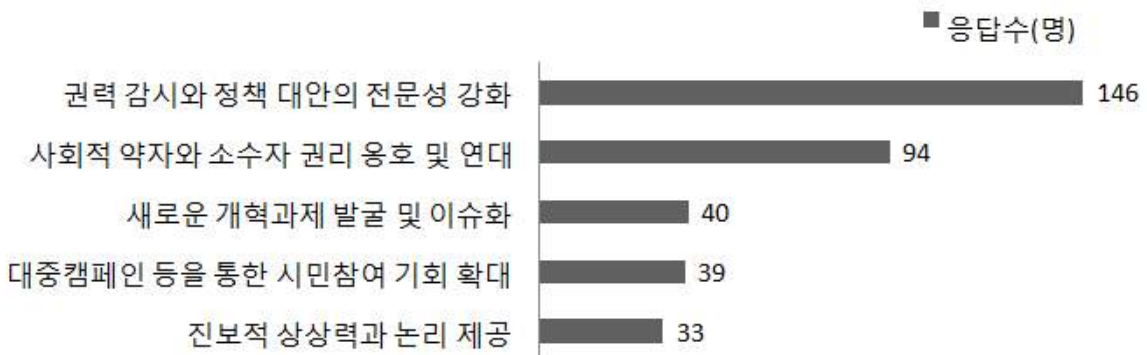
Q4. 2012년 진행한 시민·회원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2개 응답)



▶ 2013년 참여연대가 강화해야 할 방향

회원모니터단은 올해 참여연대가 강화해야 할 방향으로 ‘권력감시와 정책대안의 전문성 강화’(146명)를 가장 많이 뽑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권리 옹호 및 연대활동’(94명), ‘새로운 개혁과제 발굴 및 이슈화’(40명)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의견으로는 ‘활발한 SNS 활용’ 등이 있었습니다.

Q5. 참여연대가 2013년에 가장 강화해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2개 응답)



▶ 박근혜 정부 우선 해결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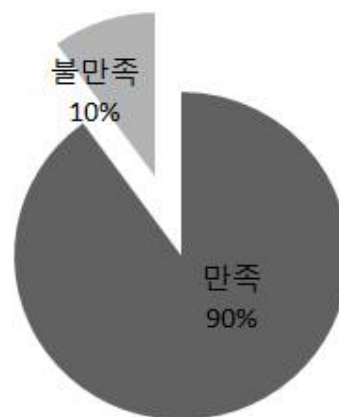
회원모니터단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언론 및 방송의 독립성 확보’(75명), ‘검찰개혁’(68명), ‘재벌개혁’(65명), ‘부자 증세 등 조세 개혁’(54명), ‘주거비, 교육비, 가계부채 등 민생문제 해결’(52명), ‘비정규직 문제 해결’(48명) 순으로 답해주셨습니다.

Q6.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2개 응답)



▶ 회원모니터단 활동 평가

회원모니터단 활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한다’(매우 만족 18% + 만족스러운 편 72%)고 답해주셨습니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형식적인 절차 같다’, ‘참여연대 사업을 잘 모른다’ 등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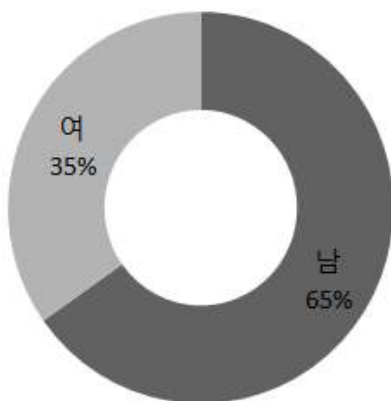
Q7. 지난 2년간 회원모니터단으로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니터단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회원모니터단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들은 2기 회원모니터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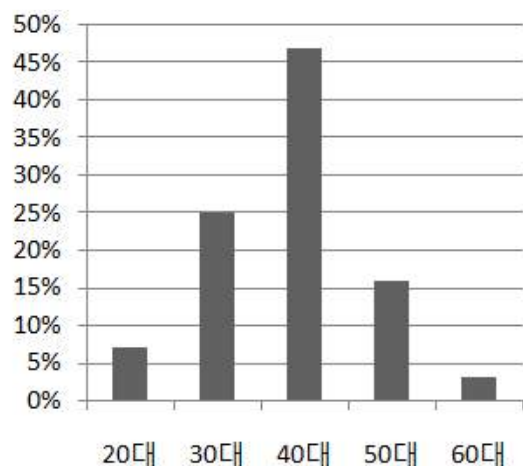
- “긴급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의견수렴 창구로 모니터단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사람을 선발하면 좋겠다”
- “모니터단에게는 더 자세한 자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 “오프라인 모임이나 카카오톡 번개 채팅 등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해 회원모니터단이 서로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 “설문 문항 옆에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링크해주면 좋겠다”
- “모니터단 활동이 참여연대 활동을 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지방 회원이 참여할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 “기본권 보호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다”
- “더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FGI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좋겠다”

[응답자 기본 정보]

□ 성별 분포



□ 연령 분포



참여연대 노래

박원순 작사 지근식 작곡 (1997년)

1.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아름답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다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후렴) 참여하자 연대하자 그 꿈 우리 함께 이루기 위해
참여하자 연대하자 아름답고 밝은 세상 이루기 위해

2.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정의롭고 맑고 깨끗해진 세상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
시민들의 목소리로 참여연대
시민의 권익은 우리가 지키자

3.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희망 속에 서로 의지하는 세상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
물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되어
흐르고 마침내 큰 강물 이룬다

내가 만약 나라 걱정에 괴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바로 참여연대 신간!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 누구를 위한 최저생계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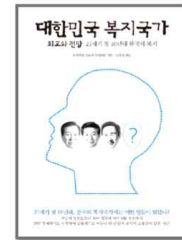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지음 | 나눔의집 | 15,000원 | 2013-02-05

희망 없는 최저생계비의 삶.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난다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에 다를 없었다. 편하게 친구를 만날 수도, 먹고 싶은 음식을 걱정 없이 사먹을 수도, 몇 백만 관객 돌파라고 연일 떠드는 영화 한 편을 맘 놓고 볼 수도 없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가 된 것이다. 이 책 안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복지국가 - 회고와 전망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지음 | 나눔의집 | 15,000원 | 2013-01-25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국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어떤 쟁점이 왜 발생하여 어떤 갈등을 낳았고 어떻게 전화되었으며 또 다른 어떤 논란과 긴장을 배태했는가? 또 이 모든 과정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본서는 21세기의 두 번째 10년대를 맞이하면서 그 첫 10년대에 한국의 복지국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연대

참여연대 연구소, 윤홍식 역음 | 이매진 | 15,000원 | 2012-12-20

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빠져 있는 오늘, 사람들은 점점 복지에 주목한다.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 중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질문에 2004년에는 29%만 복지라고 답했지만, 2010년에는 47.5%가 복지에 손을 들었다. 한국은 과연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복지국가가 돼야 할까?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해, 보편적 복지국가로 향하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노동의 친복지 연대라고 강조한다.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 -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55가지 키워드

참여연대 지음 | 이매진 | 17,000원 | 2012-12-10

노인 빈곤율 45.1%로 OECD 국가 중 1위인 나라, 전체 가구의 62.8%가 부채를 안고 있는 나라, 평균 1.09%의 지분을 가진 재벌 총수들이 평균 59.2개의 회사를 지배하는 나라, 비례대표 의석이 겨우 18%인 나라, 군사비가 271억 1300만 달러로 북한의 GDP에 육박하는데도 군비경쟁에 열을 올리는 나라, 해군기지를 만든다며 천연기념물 군락지를 파괴하는 나라. 고장이 나 빼먹거리는 한국 사회의 초상이다. 이 '고장 난 나라'를 수선하는 데 필요한 정비 목록이 도착했다. 참여연대 사람들이 꼼꼼하게 체크한 팩트와 냉철한 진단, 흔히 갖기 쉬운 의문을 정리한 쟁점, 개혁 제안으로 구성된 두터운 목록은 깨어 있는 시민이 한국 사회를 직접 진단하고 바꿔나가는 데 좋은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하는 2013년 봄, 더 많은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학교나 동네 도서관에 구매 신청해 주세요. 신입생 추천 도서로도 참 좋습니다.

제19차 정기총회 자료집

발행일 2013년 2월 23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